

보면, 이들 동호회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창출되는 가상 공간의 가상 공동체의 귀결적 형태라고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이러한 2차적 관계의 극단화와 부족의 부활이라는 모순적 경향의 결합은 현재의 이른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즉 민족국가의 해체가 소수의 지역적 결합(여기서 지역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만을 지니고 있지 않다)에 기반한 지구화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구조적인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현실에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상공간에서의 부족화를 이끌고 있으며, 가상공간에서의 부족화가 현실에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재추동하고 있는 국면이라 할 만하다.

② 새로운 부족의 형성이 미칠 사회적 영향

이들 새로운 부족들은 기존의 큰 이야기들이 미칠 사회적 영향력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각종 생활적인 주제들을 다양하게 부각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경향은 시공간의 극단적 압축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부족이 기술적인 조건이 바로 그러한 압축을 가능하게 하는 현 상황에서 탄생된 공동체인 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 새로운 부족을 현실적인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의 각 정치집단들이 조직화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 조직화의 주제 역시 이 새로운 부족의 현실적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한낱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부족의 형성은 기존의 인위적 구획을 뛰어 넘는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러 사례로 미루어 짐작되듯이, 이들이 갖는 민주적 잠재력은 엄청나며,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이 펼치는 지구화 전략에 전 세계의 곳곳에서 게릴라적으로 저항하고 또 전 지구적인 규모로 공동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긍정적 가능성 못지 않게 부정적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부족의 탄생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비용이 상당하기에 이것은 결국 구래의 중심부가 근본적으로 한계지어 놓은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공산이 크고, 소수의 정보독점가 혹은 기술독점가에 의해 일순간에 교묘한 야만으로 몰락할 가능성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존재한다. 또한, 이들 부족들이 커뮤니케이션 역소가미의 효과에 의해 보완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만을 고집할 경우, 이는 자본의 전 지구적 공세에 대한 각개격파로 귀결되어 속물적인 자(自)부족주의에 매몰될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

■ 결론

이 글은 지금까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공동체를 익명성에 기반한 가상의 공동체로 특징짓고 이것을 새로운 부족의 형성이란 개념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부족의 형성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이 현재의 전세계적 글로벌라이제이션 경향과 맞물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의 가능성은 새로운 부족이 얼마만큼 건강한 규범을 재구성해내면서 커뮤니케이션 역소가미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제 이 글은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남겨 놓았다. 공동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들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의 실제 구성요건들을 분석적인 유목으로 정리하고,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등의 문제들을 더 진전시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부족화 현상의 궁극적인 사회적 동인들은 무엇인가를 더욱 치밀하게 논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이 모든 문제들을 연구하는데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 민주주의의 확장과 진보로서 귀결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야만으로서 나타날 것인가에 관련된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언젠든, 그러한 긴장감을 잃어버렸을 때, 무조건적인 비판과 무조건적인 낙관 사이에서 편의적인 결론을 짓게 되는

4.6.5. 글을 읽고 (정책팀)

전반적으로 필자들의 의욕적인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글들이었다. 약간은 겁없이 특특 내던지는 꼬투리잡기정도는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각 글들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

첫번째 글인, 송용준의 「정보통신기술혁명과 정보민주주의」는 그간 쏟아져나오는 토플러로 대표되는 미래학류의 낙관론들과 그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양자의 한계를 기술결정론과 중후적기술론이라는 거대담론의 한계로 파악하고, 미시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한 정보민주주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정보화담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 과정으로서 파악하여 구체적인 분석과 실천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은 추상적인선언에 그치고 있다고 본다.

두번째 글, 노상훈의 「또 하나의 시장 인터넷」에서는 정보화사회의 대명사처럼 운위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검열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대한 양의 자료, 일방향매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쌍방향매체의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특정한 소유주가 없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하나의 해방구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통념에 대해 보다 폭넓은 논의수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인터넷에 등장한

상업주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자본주의의 공간지배전략에 대한 하비의 논의에 기대어 새로운 이윤창출공간으로서 인터넷시장을 점령하려는 자본의 전유양식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와 함께, 인터넷상업화라는 흐름에 대해 반대하는 진보운동단체들에 대한 논의를 곁들이면서, 모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실천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필자 역시 네트워크의 진정한 가치는 정보보다는 공동체community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정작 인터넷상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여 그것의 현실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감이 없지 않다.

세번째 글인, 윤정규의 「한국에서의 정보민주주의」는 쌍방향매체로서의 PC통신을 이용한 일상정치 발전적 가능성과 그것의 실제적인 한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의 PC통신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보적 통신운동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그리고, 통신운동은 결코 고립된 몇몇 단체들의 활동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내단체들의 네트워크구성과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연대들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통신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한 점이 흥미롭다.

마지막 글인, 정준희의 「가상, 혹은 익명적 정체성과 새로운 부족의 형성」은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근대의 일반적인 징표인 '시공간 압축' 및 '장소귀속탈피' 현상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파악하여, 이를 통해 맺어지는 새로운 가상공동체의 특징을 서술하면서, 이를 현재 '민족국가의 위기'로 대표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문제설정과 근대적 주체의 해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를 이끌고 있다. 통신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다 폭넓은 논의틀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며, 이러한 논의틀 속에서 이어질 보다 풍부한 연구결과를 기대해 본다.

4.7. [대학생신문] 기고글⁴⁰⁾

4.7.1. Blue Ribbon Says Free Speech Online (박인성)

<일부 대학가등에 동성연애자 모임이 결성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컴퓨터 통신에 동성연애자들이 "또 하나의 사랑"이라는 동호회를 만들고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나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컴퓨터통신은 이미 널리 보급돼... 청소년층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 자칫 그릇된 성문화를 만연시키는 등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성애문화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동조가 우려된다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또 일간지에 실린 기사내용이다. 이 역시 표현의 자유와 도덕의 대결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기사가 전하는 대책이란 무엇일까? 웹을 이용해 인터넷을 항해하고 있노라면 심심치 않게 파란 리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유명한 검색 사이트인 야후(<http://www.yahoo.com>)가 그러하고 또한 넷스케이프사의 홈페이지(<http://home.netscape.com>) 역시 그러하다. 이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mendment)'이 미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클린턴의 서명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주된 내용이 "통신망의 탈규제화"인 '통신개혁안(Telecom Bill)'의 제 5장에 보수적인 의원들이 슬며시 끼워넣은 것이 바로 이름도 우스꽝스런 '통신품위법-인터넷상의 음란물을 규제'인 것이다. 이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물론이다. 특히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인터넷상의 단체들, 특히 EFF(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CDT(The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VTW(Voters Telecommunication Watch), ACLU(America Civil Liberties Union), CPSR(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등이 주축이 되어 맹렬히 블루리본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더 많은 인터넷 페이지들이 블루리본을 달아줄 것과 서명한 상원의원들에게 항의전화와 편지 보내기 촉구, 그리고 3월 20일 이후 있을 본심의-현재는 법집행 정지 중이다.-를 위해 '인터넷검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수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의 인터넷 어드레스는 다음과 같다.

- EFF - <http://www.eff.org>
- CDT - <http://www.cdt.org>
- VTW - <http://www.vtw.org>
- ACLU - <http://www.aclu.org>
- EPIC - <http://www.epic.org>
- CPSR - <http://www.cpsr.org/dax/home.html>

정보연대 SING 역시 이들 단체의 '정보검열반대'에 지지하고 있으며 무척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는,

1. 통신망에 대한 검열은 기본적인 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음으로써 전사회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2. 미국의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곧 전세계적 규제가 될 것이기도 하며
3. 또한 이런 바람이 언제 우리에게 불어닥칠 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40. 정보연대 SING은 3월 초부터 [대학생신문]에 'SING와 함께 하는 인터넷 항해'라는 타이틀 아래 매주 기고하고 있다. 기존 일간지가 매일같이 퍼부어대는 인터넷 항해의 측면과는 다른 - 약간은 뼈뺀 - 방법으로, 그러나 그러하기에 더욱 무궁무진하고 가치있는 항해가 되고져 이 글들을 쓰고 있다. [대학생신문]을 접해 보지 못한 혹은 볼 수 없는 독자들을 위해 첫회분을 제외한 지금까지 기고된 글들을 첨삭없이 실어 본다.

앞으로 본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모두 지켜보도록 하자. 위의 페이지들은 무척 빠르게 갱신되고 있으므로 진행 과정을 신속히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짬이 나는 네티즌들은 레드리본캠페인 페이지(<http://www.cum.org>)를 찾아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4.7.2. 어린이 인터넷 운동의 허와 실 (허진영)

인터넷 환경교육을 통해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 / 인터넷으로 영어교육을! 인터넷 키드! 미국서 사건 선생님들과 E-mail 교환!

최근 조선일보에서 매일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키드넷운동 관련 기사들의 제목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컴퓨터 따위?에는 둔감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어느새 한발짝 앞으로 다가온 정보화사회에 대해 실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의 중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인터넷을 가르쳐야 한다는 조선일보의 또 하나의 애국적! 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켜,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내고 있다.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다. 중앙일보의 학교정보화운동, 동아일보의 인터넷트윅즈운동 등 국내 유수의 대형 신문사들은 저마다 인터넷에 관련된 대형 운동에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시키면서, 이 나라의 정보화사회 마인드를 확산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그간 언론들이 보여주었던 황색저널리즘에 대한 경계심은 이런 화려한 운동들을 바라보면서 어딘지 모를 의심을 가지게 한다. 다들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산실에는 XT급의 컴퓨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컴퓨터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교육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임시위주로 짜여져 있는 지금의 교육제도에서 컴퓨터를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도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주장이 노리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도 뻔하다. 그것은 바로 정보상품시장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주도권을 얻기 위한 언론계벌들의 사전포석인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하여 지금까지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보다 편리한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때에만 긍정적인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보상품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구축하려는 언론계벌들이 벌이는 화려한 이미지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보다 구체적인, 총체적인 정보화정책과 교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지금, 자본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정보화운동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관련 웹사이트

조선일보 키드넷 <http://www.chosun.co.kr/kidnet/>

중앙일보 IIE <http://www.joongang.co.kr/iie/>

관련 토론실

참세상 Go JINBO 3 정보통신운동으로 가는 길

나우누리 Go ACRO 2 어린이 인터넷 열풍의 허와 실

4.7.3. 전국적인 정치신문!! 인터넷? (김상현)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에 러시아 대중의 대부분이 문맹이라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정치신문의 배포'라는 혁명적인 발상은 당시의 식자층을 조직화해서 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끌어 들였다. 여전히 지금도 변혁운동, 진보운동권은 전국적인 정치 신문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활자 매체들이 범람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매체들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질것일지는 약간 의심스럽다. (화려한 자본의 매체보다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미국의 경우, 다원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극좌적 운동단체에서 발행하는 'Bad Subject'와 같은 진보적인 온라인 잡지는 정치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잡지이다. 여기에는 시사각각으로 정치적인 사안에 관한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전체적인 DB구축도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글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적인 진보적 네트워크인 IGC(Institute for Global Communication)에 가보면 문화방송의 파업관련 소식이 있다. 그리고 CNN news page에 가보면 현재 국내 학우들의 집회 소식 연세대 노수석 학생의 사망 소식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내 단체들의 인터넷 사용은 대개 미비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이슈들이 우리나라에는 있지 않고 외국망에만 올라온다는 것은 슬픈일인 것 같다.

이와 같이 인터넷은 자료의 신속하고 국제적인 교류, 방대한 DB의 구축을 가능케 함으로써 대안적 Media로서의 가능성을 굳혀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Internet은 새로운 혁명적 매체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진보운동은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국제적인 연대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대안적 매체로서 그리고 기존 활동과 연동되는 새로운 활동공간으로서 Internet을 인식하게 된다면 기존 운동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주소 (URL)

문화방송 파업관련 : <http://www.igc.apc.org/strike/strike14.html#seoul>

Bad Subject Home Page : <http://english-www.hss.cmu.edu/bs/>

CNN 한국 학생사위관련 : <http://www.cnn.com/WORLD/Newsbriefs/9603/0330/index.html#4>

4.7.4. 네트워크는 새로운 소통을 만들어 줄 것인가? (고영경)

많은 이들이 기존 매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적 매체로 인터넷을 주목한다. 이는 인터넷이란 네트워크가 가지는 양방향성의 특징 때문이다. 기존의 매체가 중앙에서 말단으로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수직적 소통모델이라면 인터넷은 뚜렷한 중앙이 없이 개인과 전체가 평등하게 만나는 수평적 소통모델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 네트워크는 기존 매체가 가지는 문제점, 즉 정보와 권력의 중앙집중,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소통의 부재, 말단의 소외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에 우리는 매우 익숙하다. 바로 우리들의 조직인 학생회에 대한 유서깊은 비판이기 때문이다. 위계화되고 어느 정도 관료화된 현재의 학생회와 일반 학우들의 괴리가 깊어지는 것은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로 나타나며, 요즘의 학생회 선거에서 '소통'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는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네트워크의 수평적 소통모델이 대안적 학생회 상으로 논의되는 듯하다.

새로운 공간으로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생회도 통신 네트워크로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국내 통신망에 ID나 방을 개설한 곳도 많으며, 인터넷에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이용상황은 저조한 듯하다. 활발한 토론과 feedback, 적극적인 참여로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되었던 통신 공간은 학우들의 무관심속에 썰렁한 분위기이며 학생회의 일방적인 선전 선동의 공간으로, 즉 네트워크에 붙이는 대자보 정도의 위상에 그치는 것 같다. 네트워크에 대한 마인드와 새로운 이용 문화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부족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여기서도 학생회와 학우들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으며, 기존의 소통구조와 권력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다. 새로운 소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네트워크는 무관심 속에 썰렁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신한국당이 개설한 BBS에 무관심한 것과 같은 이유이다. 발달된 네트워크가 새로운 소통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물적 기반이며 가능성일뿐, 그것을 이용하여 활발한 소통을, 새로운 권력관계를 이루어 내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4.8. 통신연대 월례 포럼

4.8.1. 통신연대 3월 월례포럼 정리 (장여경)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참세상 아이디입니다.

01410 대책회의 : 이동영(014xy)님 //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 이요뜸(k2bar.n)님, 최세진(Neoscrum)님 // 새벽길 : 이승연(SJ246)님 // 얼터너티브 : 이혁수(알트넷)님 // 정보연대SING : 오병일(SING)님, 이혁(antinet)님, 김상돌(돌이여)님 // 찬우물 : 박현태(nowcw)님, 박소경(피피침)님 // 참세상 : 김형준(smallake)님 // 청년정보문화센터 : 박준호(nowINC)님 // 한국과학기술청년회 : 홍희선(tsKOMSAT)님 // 현대철학동호회 : 김바로(zspk)님, 김계명(AD72KJM)님, 박은정님

■ 3월 주제토론

<검열>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월례포럼을 가졌습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정책연구실의 박현순님께서 자료와 함께 최근의 검열에 대한 동향을 미국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그에 대한 포럼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와 서기는 각각 청년정보문화센터, 찬우물에서 맡아주셨고, 곧 토론 내용 기록이 게시판에 올라올 것입니다. 또한 빠른 시일내 포럼에 쓰였던 자료를 게시판에 올리겠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월 월례포럼 준비

이미 공지가 나간대로, 4월 월례포럼은 01410대책회의와 함께 꾸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먼저 결정되었습니다.

* 4월 월례포럼 날짜 : 1996년 4월 27일(일)

그밖의 사항은 월례포럼 준비팀을 꾸려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준비팀에서는 월례포럼 주제 구체화, 방법, 범위 등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월례포럼 준비팀 모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팀 모임 날짜 : 3월 30일(토) 오후5시

장소 : 바른정보 사무실(원효로2가, 713-5534)

■ 키텔

이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정보연대SING의 기획안을 토대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보연대의 제안 취지에 대해서는 널리 공감하면서도 '통신연대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주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는 회원단체들을 중심으로 관심있는 이들에게 알려내고, 컴퓨터를 사회운동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 작업을 함께 하자는 부분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키텔이 실제로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 단순한 기능교육, 혹은 추상적인 '정보화 마인드 교육' 양쪽을 경계하면서 그간 사회 각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컴퓨터 교육의 오류와 경험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정 부분은 제안되었던 기간보다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로 했으며, 제안자인 정보연대SING에서 조만간 다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셨던 만큼 2-4번 게시판중심으로 적극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힘있는 실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규장각 프로젝트

현재 THINC21 뉴미디어 연구팀이 제안하여 진행되고 있는 이 규장각 프로젝트의 개요는 아래 게시물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계에 WEB을 통하여 한국을 제대로 알려내고, 좋은 자료들을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자는 규장각 프로젝트의 취지는 이미 통신연대 단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으로 한국 현대사를 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의지 있는 이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으며,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들이 필요합니다.

THINC21 뉴미디어 연구팀에서 조만간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제안을 할 텐데요, 특히 단체 여러분이 각 단체에 널리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월례포럼은 지난 시간 변경에 이어 원래 예정했던 장소가 공사를 하는 바람에 게시판지가 갑작스럽게 장소를 변경하였는데요, 본의 아니게 좁고 불편한 자리에서 힘들게 토론을 하게 한 데 대해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평일날 늦은 시간에 월례포럼이 이루어져서, 중요한 이야기들은 많은데 급하게 이루어진 데 대해서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든 점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밝은 얼굴들 뵈게 되어서 저는 참 좋았구요, 특히 불쑥 무례하고 대가없는(?) 강의를 요청했는데도 성의를 다해주신 박현순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이루어지는 월례포럼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서로 반가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래 여러분들의 말씀따라, 이제 통신연대가 만들어진 지도 반년, 월례포럼을 뛰어넘는 실천을 향한 초심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가 행해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나 뒤돌아 자리가 소중하고 즐거운 까닭은, 그 자리에서 각 단체들의 어려움과 기쁨, 통신연대에 대해 바라는 것들이 솔직하고 따뜻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사이사이에 막힌 붓물을 트고 것처럼 이야기들을 나눕시다.

4.8.2. 통신에서의 음란. 폭력물에 대한 사회적 규제 동향 (박현순41)

- 미국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컴퓨터 통신과 음란 . 폭력물

컴퓨터 통신은 첨단 정보화 사회의 가장 강력한 문화 전파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울러 컴퓨터 통신에 실리는 각종 음란.피해물은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에게까지 아무런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어 정보화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컴퓨터 통신은 사생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잡지나 비디오를 구매할 필요 없이 성적 자극을 주는 음란한 영상물을 선택해 받아 볼 수 있다는 점, 가족이나 친구의 눈에 띄지 않게 자신만의 자료를 보관하고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성병이나 에이즈 감염의 위험 없이도 성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정보초고속도로 상에서 디지털화된 선명한 화면의 포르노그래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 통신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컴퓨터 통신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는 사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서울 지검은 1994년 9월부터 95년 8월 말까지 1년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 사범 34명을 적발해 그 중 11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NewsMaker 95. 10). 또한 작년 4월 발족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컴퓨터 통신의 내용을 규정에 따라 사전 심의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들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제 47조), 전기통신사업법(제 53조), 전산망보급 확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을 근거로 형사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컴퓨터 통신의 폭력 .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정부 역시 규제 정책 수립에 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컴퓨터 통신의 폭력.음란물 규제 정책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규제 논리의 문제점과 현실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컴퓨터 통신은 인쇄 매체와 방송과는 달리 개인의 정보 전달과 습득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매체이다. 방송의 규제는 '전파의 희소성'과 '침투성(pervasiveness)' 논리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컴퓨터 통신은 누구든지 정보를 만들어 송신하고 받을 수 있으며, 수용자가 능동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방송의 규제 논리로 컴퓨터 통신을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또한 컴퓨터 통신을 규제하는 정책이 수립된다 하여도 폭력성과 음란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규제 방법의 부재로 많은 현실적 혼란을 겪을 것이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정보초고속도로 상의 포르노그래피 영업(Marketing Pornography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y)"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제시한 7월 3일자 Time지의 "사이버폰(Cyberporn)"이라는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컴퓨터 통신의 폭력.음란물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41.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조사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와 더불어 네브라스카 주 민주당 상원의원 엑슨(Exon)과 워싱턴주 공화당 상원 의원 고튼(Gorton)이 지난 95년 3월 사이버 스페이스의 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하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을 제출하였으며, 96년 2월 8일 클린턴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법안은 미국내 보수파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중 예술의 도덕성 문제 제기과 함께 중요한 도덕전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에서는 이법이 미수정헌법 제 1조가 명시하고 있는 언론 자유 보장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반론을 제기하며 이는 바로 19세기 조지 버나드쇼가 이름 붙인 콤스톡커리(Comstockery)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다시 도래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국의 통신 규제 정책

- 미국의 컴퓨터 통신 이용 현황 및 문제점

미국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폭력.음란물의 유통과 이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 논의가 가장 활발한 나라이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 상품 판매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섹스 관련 제품이나 책 또는 자료 등의 판매 및 광고를 공공연히 실시하고 있다. 외설적인 이야기나 경험담을 실기도 하고 통신을 통해 섹스를 즐길 수 있는 사이버 유희가를 소개하기도 하며 수많은 포르노 사진은 띄워 전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 수많은 최신 정보가 게재되는 인터넷의 전자 게시판에는 보다 실감나는 3차원 섹스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사실 게시판, 성인용 CD-ROM 등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NewsMaker, 95. 10). 지난 3월부터는 케이블 채널인 스파이스(Spice)가 인터넷을 통해 월 사용료 9달러 95센트에 '사이버 스파이스 서비스(Cyberspice)'를 통해 에로틱 오디오와 비디오물을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스파이스 가입자는 스파이스와 스파이스투(Spice2)를 볼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성인영화 스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에로틱 비디오 도서관에도 접근할 수 있다. 온라인 회의(Online conference)에는 사이버섹스 포럼(the CyberSexForum), 성인 오락 산업 포럼(the Adult Entertainment Industry Forum), 그리고 스파이스와의 대화(Back Talk To Spice)가 마련되어 있다. 유스넷(Usenet)의 가장 인기 있는 섹션이 'alt.sex'이며, 'Alt.sex'는 'alt.sex.bestiality'에서 'alt.sex.woodyallen' 등 60여개 이상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유스넷 이용자는 무료로 X등급의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로 받아볼 수 있으며 Web을 통해 펜트하우스에 게재된 누드 사진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카네기 멜론 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 연구 결과 (Marty Rimm, 1995) 미국의 컴퓨터 통신 이용 현황과 문제점은 95년 7월 3일자 Time지에 실린 '사이버폰(Cyberporn)'이라는 기사에 잘 나타난다. 이 기사는 "정보초고속도로 상의 포르노그래피 영업(Marketing Pornography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y)"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 결과를 주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카네기 멜론 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마틴림(Marty Rimm)이라는 학생의 연구로 현재 미국의 컴퓨터 통신 이용 실태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연구자는 4개월 동안 가장 인기 좋은 5개의 유스넷으로부터 음란 영상물을 받았으며, 68개의 성인용 전자 사서함 ("adult" computer bulletin board system :BBS)로부터 640만 번이나 소비자에게 유행한 450,620건의 음란영상물, 만화, 텍스트 파일의 '기술 리스트(descriptive listing)'를 입수, 이중 표현이 모호하거나 기술이 첨가되지 않은 화상, 만화, 텍스트 파일을 제외시킨 292,114건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성인용 전자 사서함에 올라 있는 화상에 기록된 '표현(written description)'을 4개의 항목(oral, anal, vaginal, sadomasochism)으로 범주화하여, 이를 다시 수신 횟수(frequency of downloads), 파일의 크기, 게시판에 등록된 날짜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포르노그래피에 의해 제공되는 '표현(written description)'을 내용분석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음란물소비 형태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음란물 소비 형태를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 둘째, 이용의 편의성 및 산재성: 소비자들은 유스넷,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상업용 성인 전자 사서함 등을 통해 일반 포르노그래피는 물론이고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수간 등 변태적 성에 관련된 영상을 받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포르노그래피는 현재 미국 50개 주의 2천여 도시와 전세계 40여개 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접근하고 있다.
 - 셋째, 높은 수익성: 유스넷 포르노그래피의 71%가 상업용 BBS에서 가져온 것이다. 미국에는 상업용 BBS가 수천 개에 이른다고 한다. 상업용 BBS의 한달 평균사용료는 10 - 30 달러이며 규모가 가장 큰 5개 BBS의 연간 수익이 약 1백만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 넷째, 엄청난 양의 온라인 포르노그래피: 유스넷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의 83.5%가 포르노그래피이다. 이는 다음 세대의 멀티미디어 정보도 여전히 포르노그래피로 가득찰 것임을 암시한다. 소비자들이 성인용 BBS를 통해 6백만번 이상 다운로드 받아 본 자료에는 아동포르노그래피, 수간, 변태적성을 묘사한 화면 등이 절반을 차지한다.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와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는 잡지나 서적과 같은 매체를 통해 얻어지지 않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보다는 아동포르노그래피와 변태적 성을 묘사한 이미지에 대한 요구가 현저하게 높다. 이는 인쇄 매체 시대의 포르노그래피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포르노그래피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 이 연구 결과는 조지타운 로저널(Georgetown Law Journal)에 게재되었다. 마틴 림의 연구가 타임지에 실리자 이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컴퓨터 음란물의 규제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이 연구 결과를 예로 들어 한층 더 규제의 합리성을 주장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성인용 BBS를 인터넷과 같은 것으로 보고 인터넷 안에 엄청난 양의 포르노그래피가 유통되고 있다고 한 점, 유스넷에서 포르노그래피가 차지하는 부분은 소량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유스넷은 인터넷을 흐르는 정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그럼에도 유스넷의 83.5%가 포르노그래피라고 한 점" 등을 들어 림의 연구가 방법론과 결론 부분에서 많은 결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Mike Godwin, 1995). 림의 연구에 대한 사회적인 물의가 일자 Time지는 3주 후 림의 연구에 결점이 많다는 점을 시인하는 기사를 실었다. 림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큰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현재 미국의 컴퓨터 통신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 정보 통신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 결과를 예로 들어 정보 통신 규제법을 적극 주장하나 통신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이 연구가 정부의 규제 정책을 더 강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Andrew Kantor and Tristan Louis, 1995, Joel Furr, 1995).

- 미국의 음란물 규제 정책 :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1) 통신품위법의 개요 및 진행과정

컴퓨터 통신의 음란, 폭력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네브라스카 주 민주당 상원 의원 엑슨(Exon)과 워싱턴주 공화당 상원 의원 고튼(Gorton)은 작년 3월 사이버 스페이스의 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하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을 제출하였다. 엑슨 법안이 제안되자 다른 의원들의 비난의 소리도 높았다. 그 가운데에서도 버몬트 주의 패트릭 리이(Patrick Leahy) 상원 의원은 엑슨 법안에 대한 대안법(안)으로 "쌍방향 미디어에서의 어린이 보호, 사용자 강화, 표현의 자유 연구 법안(Child Protection, User Empowerment, and Free Expression in Interactive Media Study Bill)"을 내놓았다. 이 법에 의하면 사법부와 상무부가 직접 인터넷, 상업, 비상업적 온라인 서비스로부터 받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수단을 연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첫째, 현재의 컴퓨터 네트워크의 음란물 배포와 아동 포르노그래피 배포를 규제하고 있는 형법이 쌍방향 미디어에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둘째, 그러한 법을 강화할 수 있는 연방, 주, 지방 법에 대한 평가, 셋째, 폭력적이고 명백히 성적이며 위협적인 내용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이 접하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하며, 상업적이거나 비상업적인 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수단에 대한 평가. 그리고 쌍방향 미디어에서 헌법적 가치의 보호를 받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에 대한 평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적 수단의 발전에 대한 장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단체들은 리이의 이 대안 법안이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며 이를 지지했지만 결국 인터넷을 위험물로 보는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무효가 되어 버렸다. 이와 더불어 하원 의원 콕스(Cox)와 와이든(Wyden)도 온라인 내용을 부모가 통제할 수 있게 하며 FCC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터넷의 자유와 가족 강화를 위한 법안(the Internet Freedom and Family Empowerment Act)"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무산되어 버렸다. 결국 수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엑슨의 "통신품위법"은 1996년 2월 1일 하원에서 414대 16으로, 상원에서는 91대 5로 통과되어 1996년 2월 8일 클린턴 대통령의 사인과 함께 최종 승인되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음란하고 외설적인(obscene, lewd, lascivious, filthy or indecent) 언급(comment), 질문(request), 암시(suggestion), 제안(proposal), 영상(image) 등을 전기 신 수단(telecommunications device)을 이용해 전달하면 최고 2심 5만 달러의 벌금과 2년 구속을 당하게 된다(참고: '통신품위법' 추진 일정,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제 5편 번역자료).

2) 통신품위법에 대한 반론

엑슨의 통신품위법안이 제안되자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선 이 법안에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Telecommunications device)"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다. 법안의 정의에 의하면 페이퍼뷰 영화를 디스크램블하는 셋탑 박스도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도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Cablevision]의 Chris Nolan은 이 법안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동 포르노 그래피 옹호자로 비난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주며, 자칫 어린이 보호보다는 시민의 자유에 관한 논쟁을 타락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500개의 채널 가운데 선택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엑슨의 이 법안은 시청자를 무지하다고 전제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고 신중을 기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 법안에 의하면 온라인 서비스 회사로 하여금 어린이를 보호하고 법을 준수한다는 미명 아래 수신자들의 정보 교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시민 단체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the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의 다니엘 바이츠너(Daniel Weitzner)는 이 법안이 수정 헌법에 위반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이야기방과 시적 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음란한 메시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엑슨이 제출한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분산되어 복잡하게 연결된 5만개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3천만 대의 컴퓨터를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정보를 어떻게 검열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엑슨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와 기술을 위한 모임(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미국적 삶을 위한 모임(the People for the American Way)', '카토재단(the Cato Institute)', 그리고 '미국 시민의 자유를 위한 모임(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등이 이 법의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의 음란물 규제에 관한 사법적 논의를 예로 들어 엑슨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1) 미국의 음란물 규제에 관한 사법적 논의

엑슨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은 대법원이 지금까지 판결 내렸던 음란성과 외설성에 대한 사법적 논의를 예로 들면서 엑슨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민 단체가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의 음란성과 외설성에 대한 사법적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음란성'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24년 전 "밀러 대 캘리포니아(Miller v California)" 판결에서 음란성 기준을 첫째, 성에 관한 묘사 혹은 표현 등이 '현저한 노골성(patently offensiveness)'을 띠지 않겠, 둘째,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찰할 때, 그 중심적인 경향이 독자적 하위급 '호색적인 흥미(prurient interest)'를 자아내게 할 것, 셋째, 그것을 읽거나 보고 듣는 자가 이에 대해서 '혐오감(repulsiveness)'을 가질 것, 넷째, 문학적, 예술적 가치 등과 같은 '보상할 만한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을 것(utterly without redeeming social value)' 등으로 보고 "성과 관련된 내용이 호색적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문학적, 예술적,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수정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 내림으로써 음란성과 외설성에 대한 법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FCC는 '음란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그 표현이 일단 보통 사람의 호색적인 흥미에 초점을 둔 경우, 7개 단에서 정한 한대로 본질적으로 혐오감을 주게끔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 그리고 그 표현이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혹은 과학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방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FCC는 1978년 패시피카 재단(Pacifica Foundation)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외설(indecent) 프로그램의 기준을 7가지 속어(seven dirty words)의 사용으로 정의 내려 7가지 속어(shit, piss, fuck, cunt, cocksucker, mother-fucker, tits) 가운데 하나라도 나오는 방송은 외설 프로그램으로 보았다. 1987년 FCC는 '7개 금지어'로 한정된 기준을 보다 일반적으로 정의 내려, 외설이란 '현 시점에서 방송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도발적인 맥락이 분명히 있으며 성적 또는 배설에 관한 행위나 기관에 대한 말 또는 프로그램 소재'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FCC는 외설과 음란 프로그램을 방송한 방송국에 대해 통신법 제 312조 및 503조에 기초하여 방송국 면허와 건설 허가의 취소 또는 면허 금지,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또 당해 방송을 실시한 일수마다 각각 2,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상원 의원 제시 헬름스(Jesse Helms)는 지금까지 방송에만 한정시켜 왔던 FCC의 외설물에 대한 규제를 확장시키고자 했으나 1989년 세이블 커뮤니케이션사(Sable Communication) 대 FCC 판결에서 대법원이 전화 섹스 서비스(dial-a-porn)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합법적이나 외설물의 규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여전히 외설물은 수정 헌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로 볼 때, 음란 프로그램은 사법 관할로서 수정 헌법 제 1조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전혀 없으며, 음란 프로그램을 방송한 자는 연방 형법에 의해 기소 가능하다. 이와는 달리 외설 프로그램은 사법 관할이 아니어서 기소할 수도 없고 FCC가 행정처분을 하는 정도이며, 내용이나 방송되는 시간대 등에 따라 수정 헌법 제 1조에 의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듯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음란하다는 판결을 받은 내용을 제외한 '외설적' 내용은 수정 헌법의 보호를 받아 왔으나 지난 6월 엑슨 법안의 통과로 인해 지금까지 대법원이 주장해 오던 '외설물'에 대한 수정 헌법의 보호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시민 단체들은 인쇄 매체와 구두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보장되었던 표현의 자유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매체에서는 보장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를 지향하는 '정보 통신 개정 통합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엑슨 법안의 조항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2) "엑슨 법안의 위헌 문제 분석에 관한 보고서"

(Constitutional Problems with the Communications Decency Amendment)

미국의 시민 단체들은 음란물 규제에 관한 사법적 논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방송과 통신의 규제 논리의 차이를 들어 엑슨 법안의 위헌성을 논하고 있다. 그 가운데 "침단 전자 통신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엑슨 법안의 위헌 문제 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FCC가 컴퓨터 통신의 내용을 규제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수정 헌법의 위반이다.

의회가 컴퓨터 통신을 방송과 같은 매체로 간주해 FCC로 하여금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 분명히 아니다. 지금까지 FCC는 단지 2개의 매체에 관해서만 규제해 왔다. 하나는 TV, 라디오와 같은 방송 매체이며, 또 하나는 공공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전화 상업서비스이다. 그 외 어떤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대해 정부가 외설적인 내용을 규제하는 헌법적 권한을 가진 적이 없다. 연방 정부의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 논리는 두 가지에 기초한다. 하나는 '전파의 희소성' 논리이다. 고등법원은 전파는 제한된 중요한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하나의 논리는 방송의 '침투성(pervasiveness)'이다. 대법원은 FCC 대 패시피카 재단의 판결에서 방송은 가정에 깊숙이 파고드는 매체로 성인이 위험한 내용에 노출될 수 있으며 어린이는 외설적인 내용에 사전 준비 없이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기에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전화 서비스의 규제는 공공 사업자를 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에 근거하기 때문에 FCC가 전화 섹스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방송 규제 논리와 공공 사업자 규제 논리 그 어느 것도 정부의 컴퓨터통신에 대한 규제 논리를 대신할 수 없다.

첫째, 컴퓨터 통신에 기초한 새로운 미디어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 제공자, 상업적 통신 시스템에서부터 예호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 컴퓨터 게시판 시스템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곳에서 언제 어느 때나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회소성'의 논리는 적용될 수 없다.

둘째, 컴퓨터 통신은 폐시피카 판결의 경우처럼 "침투적(pervasive)"이라고 볼 수 있다. 방송의 경우, 시청자는 TV와 라디오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컴퓨터 통신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사용자가 인터넷, 프로디지(Prodigy)나 아메리칸 온라인 서비스(American Online) 등을 통해 다양한 장소의 다양한 소스로부터 능동적으로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셋째,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에이티 앤 티(AT&T)나 벨사우스사(BellSouth)처럼 모든 방문객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공공 사업자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의회는 FCC가 전통적인 인쇄 매체, 영화, 구두 커뮤니케이션에 '외설적' 내용을 규제하도록 권리를 부여할 수 없듯이 의회는 FCC에게 넷컴(Netcom)이나 컴퓨서브(CompuServe)와 같은 서비스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수정 헌법의 위반이다.

b)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른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해결방법을 요한다. 연방 정부가 컴퓨터 통신의 외설물을 규제하는 헌법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할지라도 연방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 수단'을 취해야 한다. 세이브 커뮤니케이션 선사 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화 섹스 서비스의 외설적인 내용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화 섹스 서비스 완전 금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전화 섹스 사업의 완전 금지보다는 전화 섹스 사업자로 하여금 수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하게 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 수단을 선택하였다.

엑스 법안은 FCC가 전화 섹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위해 규제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화 섹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가 컴퓨터 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미디어에 FCC의 강화된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 수단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외설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자는 누구든지 기소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하면 넷컴과 같은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섹스에 관한 유스넷 파일(alt.sex.*)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넷컴이 18세 이상의 넷컴 서비스 가입자에게 외설적인 유스넷(Usenet) 뉴스 그룹에의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 규제를 받고자 한다고 해도 넷컴은 다른 인터넷 접근 서비스 사업자가운데 하나의 유스넷 분배 노드(node)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외설적인 정보를 유스넷을 통해 유통시키게 되며 따라서 엑스 법안의 규제를 면할 길이 없다.

실질적으로 이 매체는 외설적인 내용에 민감한 이용자와 어린이를 동시에 보호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며,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와 서비스 사업자의 넷 관리 컴퓨터는 매우 지능적인 프로그램 수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설적인 내용을 걸러 내는 장치를 만들기가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수정 헌법의 보장 선상에서 그러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해야 하며, 어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최소한의 규제 수단"일 것이다. 이와 아울러 개인이나 가족으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여과 장치를 위한 기술 개발의 장려는 전 세계적 컴퓨터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c) 성인이 어린이에게 적합한 내용에만 노출되도록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 외설적 내용과 미성년자에 관한 통신품위법 조항은 극적 효과와 치명적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법이 입법화되면 넷의 모든 공적 영역과 유스넷으로 알려진 전세계 연맹 시스템은 공공 도서관의 어린이 섹션으로 변해 버릴 것이다. 엑스법안으로 인해 유스넷과 같은 공공 장소가 정부의 규제 아래 어린이에게 안전한 곳으로 바뀌는 대신, 성인들은 제임스 조이스 작품에 나타난 성적 내용에 관한 토론, 섹스피어의 외설적 내용에 관한 설명, 그리고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기술 묘사 등 성인 관련 주제들을 제한된 골방에서 나누는 수밖에 없다. 결국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악마 시의 장점에 관한 국제적인 토론이 일어날 수 없게 된다. 결국 우리는 컴퓨서브의 성인방에만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 법은 지적 다양성과 넷의 활기를 파괴하고 말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신품위법은 정부가 새로운 미디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정부 중심적인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특성이 전혀 다른 매체에 기존의 규제론을 적용시키는 통신품위법의 입법화는 실질적이고 헌법적인 문제를 창출할 것이 분명하다. 온라인 서비스와 지역사회 의 발전을 동결시키고, 넷의 공공 장소에 실린 내용을 국민학교 수준으로 강등시키는 이 엑스 법안이 커뮤니케이션 기반 구조를 탈규제화하기 위한 법안에 첨부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역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EFF는 의회도 아니고 FCC도 아닌 학부모가 자녀들이 무엇을 시청해야 할 지를 결정하는 책임과 권리를 가졌다고 믿는다.

(3) 시민단체 및 업계의 대응 방안
'통신품위법'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할 기미가 보이자 60여개의 시민단체연합은 검열법안의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1995년 12월 12일을 'NationalInternet Day of Protest'로 정해 주요 상·하원 의원에게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항의서한을 보내는 운동을 펼쳤다. 또한 1996년 2월

8일 클린턴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자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는 지난 2월 26일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새로운 텔레컴법의 규제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미국도서관협회,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등 20여개 이상의 기업체와 단체가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Voters Telecommunications Watch는 인터넷 화면을 48시간 동안 검閲해 검열법에 대한 항의를 강하게 표현했으며, Blue Ribbon Campaign을 펼치고 있다(자료 참고).

시민 단체들의 반발과 함께 미국 주요 정보통신업계는 법적 규제에 앞서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마이크로 소프트, IBM, AT&T, 애플, 네트스케이프, 아메리카 온라인, 컴퓨서브, 타임워너 등이 주축이 된 음란정보차단 협력 기구(PICS)를 발족했다. 이 기구는 인터넷 정보 검열을 위한 소프트웨어 표준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프로토콜(통신 규약)을 개정, 폭력 및 성적 표현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그 등급에 따라 통신망 이용자의 정보 접근을 통제하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등급에 따라 미성년자의 관람 여부가 정해지는 미국 영화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정보도 등급이 매겨져 학부모나 교육 기관들이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특정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원의 수가 엄청나게 많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정보제공자는 이같은 등급 표시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는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소프트웨어사와 같은 주요 인터넷 소프트웨어사는 "초고속 정보 통신 시대의 가족 강화를 위한 모임(Information Highway Parental Empowerment Group)"을 조직해 학부모나 교사들이 자녀에게 부적합한 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세울계획임을 밝혔다. 이들은 첫째, 학부모가 자녀들이 좋지 않은 내용에 접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둘째, 정보 제공자나 등급을 매기는 제 3자가 인터넷의 내용을 특성화할 수 있게 하며, 셋째 인터넷 접근 시스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갖고 사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노력 중이다.

지난 6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인터넷의 World Wide Web 멀티미디어 분야를 초보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browser'를 만든 캘리포니아의 마운틴뷰사와 시애틀의 Prograssive Networks사와 제휴하였다. 이들은 이미 음란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판매하고있는 L.A.의 서프워치(SurfWatch Software)사와 같은 소규모 기업들과함께 보다 큰 컨소시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해의문화산업정보, 95. 10).

또한 정보기술협회(The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America :ITAA)와 남부 캘리포니아 소재 학부모 연합회인 세이프서프(SafeSurf)가 자율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Andrew Kantor and Tristan Louis). ITAA는 영화 산업의 등급 체계와 같은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ITAA 회장은 통신품위법이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다음 6가지에 연구를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즉 등급 체계, 교육 캠페인, 심의 기준(code of standards), state watch program, 기술적 해결 방안, 법적 보호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할 예정이다. SafeSurf는 인터넷을 어린이를 위한 나쁜 곳이 아니라 좋은 곳이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리고 이미 서프워치(Surf Watch), 사이버 패트롤(Cyber Patrol), 사이버시터(CYBERsitter)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이용자의 컴퓨터로 들어오는 외설 이미지나 동화상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차단케 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의 음란물 이용을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등장했다.

■ 전망과 과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정보통신 규제 정책은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이에 대한 반론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응 방안보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정보 통신 윤리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자녀와 가족 보호를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단체는 컴퓨터 통신의 음란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조선일보, 8. 4). 이 단체는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도움말을 주고 있다. 첫째, 컴퓨터는 집안의 가족 공용 공간에 놓고 쓰도록 한다. 둘째, 컴퓨터 통신 서비스와 인터넷은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컴퓨터를 없애 버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녀와 함께 통신이나 인터넷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컴퓨터를 가족이 함께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셋째, 문제가 있는 온라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한다. 미국의 쇼핑물에 성인 전용 서점이 없듯이 대중용 컴퓨터 통신 서비스 또한 음란 정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넷째, 영상물이 어떻게 컴퓨터를 통해 전달되는지, 그리고 그 영상 파일은 어떤 것인지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다섯째, 자녀들이 컴퓨터를 통해 음란 정보를 원천적으로 접하지 못하도록 지방의회 의원과 국회의원에게 압력을 가한다. 이때 적절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폭력·음란물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이에 대한 논의도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그다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폭력·음란물의 사회적 병폐에 대한 논의는 시대와 사회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규제와 대응 방안에 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컴퓨터 통신의 자유를 제한해서도 안되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통신의 음란·폭력물로부터의 보호는 '교육'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언론, 교육기관,

가정이 합심해서 이를 위한 협조 체계를 갖추어 정보화 윤리 교육을 시행하는 것만이 가장 효율적인 방지책과 치료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42).

■ 별첨 : 제 5편 음란 및 폭력(Obscenity and Violence)

소편 A -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음란물 유통과 악용 및 오용 (Obscene, Harassing, and Wrongful Utilization of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501조 이 편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이라한다.

502조 '1934년 커뮤니케이션법' 하에서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한 음란물 유통과 악용 223조(47 U. S. C. 223)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a)항을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한다.

"(a)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1) 국내, 국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A)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telecommunications device)을 이용해 고의로 타인을 괴롭히고 위협할 목적으로 음란하고 음탕하며 비천하고 외설적(obscene, lewd, lascivious, filthy, or indecent)인 어떠한 언급, 요구, 시사, 제안, 이미지 및 그밖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제작하고 전송하는 자

"(B)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telecommunications device)을 이용해 고의로 수신자가 18세 미만의 어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음란하고 음탕하며 비천하고 외설적(obscene, lewd, lascivious, filthy, or indecent)인 어떠한 언급, 요구, 시사, 제안, 이미지 및 그밖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제작하고 전송하는 자

"(C) 대화나 통신의 지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타인을 괴롭히고 위협할 목적으로 전화하거나 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자

"(D) 타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타인의 전화가 반복해서 울리도록 하는 자

"(E) 타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전화를 걸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자

"(2)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이 (1)호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고의로 허락하는 자는 under title 18, United States Code에 근거한 벌금과 최고 2년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의 새로운 조항을 삽입한다.

"(d)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1) 국내, 국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고의로

"(A) 특정인이나 1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다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또는

"(B)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다음의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현시점의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고 전체 맥락상으로 명백하게 혐오를 일으키는 성적 또는 배설 행위 혹은 관련 생식기관을 묘사하거나 서술하는 어떠한 언급, 요구, 시사, 제안, 이미지 및 그밖의 커뮤니케이션

"(2)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이 (1)호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고의로 허락하는 자는 under title 18, United States Code에 근거한 벌금과 최고 2년의 징역에 처한다.

"(e) 사법적 구제

"(1) 어떤 사람도 자신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통신수단이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접근이나 접속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접속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관련되는 전송, 다운로드, 중간기억영역, 액세스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능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a)나 (b)항을 위반한 것으로 구속되어서는 안된다.

"(2) 이 조항에서 금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고의로 배포 제작하는 회사와 공모자 또는 고의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광고하는 사람에게는 위 (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조항에 위배되는 통신수단이나 시스템 및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위 (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4) 만약 고용인과 대리인의 행위가 고용주의 계약 범위 밖이거나 고용주가 고용인과 대리인의 행위를 모르거나 인정을 해주지 않은

42. 참고 자료 : 방송동향, 1996. 3 // 조선일보, 1995년 8월 4일자 // 해외문화산업정보, 95. 10 // 해외방송정보, 1996. 3 // Andrew Kantor and Tristan Louis, "Dirty business at CMU," Internet World, 1995. 10, p 12// Joel Furr, Internet World, 1995. 11., pp. 58 - 60. // Mike Godwin, "Philip's Folly," Internet World, 1995. 10., pp. 102 - 104. // Marty Fimm, "Marketing Pornography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1995, 7 : http://rfrn.pgh.pa.us/guest/mrtxt.html // News+, 95. 10, 19 // Newsmaker, 1995. 10. 26

경우, 어떤 고용주도 고용인이나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구속당하지 않는다.

"(5) 다음의 경우에는 (a)(1)(B)항을 근거로, (a)(2)항과 (a)(1)(B) 또는 (d)항을 근거로 기소당하지 않는다.

"(A) 각 조항에 명시된 커뮤니케이션에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한하기위해 선의로 현재 실용 가능한 적절한 수단 및 합리적,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 자

"(B) 각 조항에 명시된 커뮤니케이션에의 접근을 제한하고자 신용카드, 출금계좌, 성인접속코드, 또는 성인식별번호를 요구하는 자

"(6) 위원회는 (d)항에 의거해 법에서 금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에의 접속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효과적, 그리고 적절한 수단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이 법은 위원회에 그러한 수단의 사용을 허가하고 승인하며 제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그러한 수단에 관련된 특정 상품을 승인할 권리가 없다. 동조항에서는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를 공중통신사업자로 취급해 해석하지 않는다

"(f)(1) 형법이나 민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동 조항에서 보호하고 있는 선의의 행위 및 동 조항에서 금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취한 행위는 기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어떤 주정부나 지역정부도 (a)(2) 또는 (d)항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와 관련해 영리기업, 공공도서관, 또는 고등교육기관의 상업적 활동을 비롯한 여타 활동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 절차 및 요구가 타주와의 서비스 조항 의무에 위배되지 않으며 주 내 서비스에만 적용된다면 주 정부나 지역 정부는 감독(oversight), 책임 부가(liability), 규제 시스템과 절차 및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g) (a), (d), (e), 또는 (f)조항이나 (a), (d)항에 의한 기소로부터의 구제 등의 조항은 어떤 다른 연방법의 적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 이 조항의 준수를 위해서

"(1)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A) 방송사업자나 케이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아니다.

"(B)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2)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의 의미는 230(e)(2)항에 명시된 바와 같다.

"(3) '엑세스 소프트웨어'는 클라이언트나 서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만들거나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사용자로 하여금 다음의 항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A) 내용의 선별, 여과, 허가 및 금지

"(B) 내용의 선택, 분석, 요약

"(C) 내용의 전송, 송신, 제시, 저장, 탐색, 분류, 재분류, 또는 중계

"(4) '고등교육 기관'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1965년 고등교육법'의 1201조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도서관'이라는 용어는 '도서관 서비스와 설립법'의 3편에 의거해 주예산의 지원을 받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5. Vol. 1 #4

1996. 5월 20일에 배포되었습니다.

5.1. 편집자의 변 196

5.2. DIG is ACTing! 196

5.3. 통신인 귀속에 관하여 198

5.4. 해커 귀속 사건에 대하여 208

5.5. 제 3 회 정보연대 DIG 워크숍 210

5.6. 대학생신문 기고글 212

5.7. 통신연대 워크숍 포럼 정리 214

5.1. 편집자의 변

"Big brother is watching you." 며칠 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벽에 쓰인 낙서의 내용이다. 순간 온 몸의 신경이 굳어 버렸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칸마다 붙어 있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붙인 '양의 탈을 쓴 늑대' 모습의 그려진 광고를 패러디한 광고가 이런 카피와 함께 붙어 있었다.

'감시'와 '검열'은 어느새 내가 있는 공간 어느 곳이나 이미 들어와 있었다. 심지어는 가장 개인적이어야 할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조차 감시의 눈은 들어와 있는 것이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자유로와야 할 통신의 토론공간을 검찰이 검열 통신인이 구속된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범죄자라는 이름으로 해커 몇명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인 그래서 전자민주주의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통신 공간마저 이제 검열과 감시의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공간에서 자유를 찾아야 하는가? 화장실로 도피해 보아도 이제 소용없다.

이번 4호에서는 이 사건들에 대한 정보연대의 활동 방향을 주로 실었습니다. SING a SONG이라는 공간은 그 활동의 문자화이며 앞으로 인터넷, WWW을 통해서도 힘찬 활동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해 봅니다.

5.2. SING is ACTing! (이혁)

■ 서비스 및 서버상황

- Web Server

현재 Internet Community 서버를 통하여 제공되는 웹서버는 크게 한국진보디렉토리(KPD)와 사회과학네트워크(Social Science)가 있습니다. 한국진보 디렉토리(KPD)는 단순한 한국진보단체의 인덱스를 넘어서서, 진보단체의 활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진보단체들의 인덱스, 추천 자료를 통하여 전세계 네트워크를 진보적으로 활용하는 단체들의 자세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주노총의 웹페이지가 로고 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을 마치고,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과학네트워크는 정보연대 기술팀이 추진중인 자치도서관 프로젝트와 맞물려, 사회과학서점, 사회과학 학회, 모임, 연구소, 전공자 등을 하나로 묶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개통은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Korea Internet Catalog, shareware collection이 기획중에 있습니다.

- mailing list

전자우편을 통한 의사교환...! 현재 메일링 리스트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메일링리스트는 ngo, sing, kctu, jinbo가 있습니다.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메일링 리스트는 sing입니다. 정보연대 SING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네티즌에게 열려있습니다.

- Internet BBS

인터넷 BBS를 개통하였습니다. 기존 하이텔, 나우컴 등의 기존의 메뉴구조의 BBS는 작은 BBS에는 부적당하기에, 뉴스그룹의 간편함을 주는 'UnderBe 1.05'를 깔았습니다. FreeBSD용으로 포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드(게시판)를 자유롭게 만들어 드립니다. irc서버와 연동되고 있으며, 참세상에 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 irc 서버

irc서버를 만들었습니다. irc서버는 irc.sing-kr.org입니다. 인터넷 계정이나, PPP를 사용하시는 분은irc클라이언트로 접속하시면되고요, 여의치않으신분은 bbs로 들어오시면 ir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내 존재하는 다른 irc서버와의 연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ftp server

좋은 shareware collection을 기획중에 있습니다. ftp server는 ftp.cybercom.co.kr입니다.

■ Action Alert

새로운 공간으로 열리는 네트워크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네트워크상에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몇 년전, 게시판에 올린 글에 국가보안법을 적용시켜, 구속하려 했던 사건부터, 최근에 김동업, 권종석씨는 선거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기까지 한국에서 통신 검열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소개글이 올라간 KUS멤버의 해킹사건은 그동안 네트워크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커의 활동이, 네트워크이 사회구조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현시점에서, 철저히 무시되며 배척되고, 검찰등 공권력의 정보검열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구속, 해커구속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연대 SING의 입장, 사건정리가 올라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에 치여, 반복되는 일상속에서 잊고 지내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관련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진보적 단체들'의 반응이 너무 느리다는 어느 통신인의 말이 우리의 활동이 관성화된 일상속에서, 너무나도 무심하게 그러한 사건들을 흘려보내는 것같다는 반성을 해봅니다. 진정한 'Act Now'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연대 SING은 기부금, 컴퓨터 시스템 등을 기증받습니다.

- 정보연대 SING에서 함께 활동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영문번역을 도와주실 분을 원합니다.

5.3. 통신인 구속에 관하여 (박인성)

5.3.1. 문제가 된 게시물들과 그 반응.

■ 천리안 김동업씨의 글

제목 : 의리의 장세동 vs. 배신의 김영삼

아래 어떤 "다케시마"파가 장세동을 의리의 표상으로 받들어 모시는 것을 보고 아주 호뭇한 기분이 들어 이 글을 쓴다. 원래 누구의 반박글이 있나하고 이 곳에 들어왔는데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겠다니... 김이 빠져버리누만. 대신 썩은 호박이라도 찌르고 나갈터이니 양해하시길!

1. 장세동의 의리 17년

이 인간이 태어난 곳은 전라도 장흥땅이라고 한다. 어려서부터 서울에서 살았고 고등학교도 "성동공고"를 나왔지만... 아무리 그가 서울사람이고 싶더라도 장세동은 전라도 사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장세동의 본적은? "서울"

이 의리의 사나이는 영남군문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본적부터 파 울리는 "의리"를 보여준 것이다.

(전라도 차별대문에 의리있는 전라도 사람 상당수는 요런 짓을 눈뚱감고 저지른다.)

79년 12.12 때 이 인간이 직속 상관에게 어떤 "의리"를 보여줬는지는 중뻐리까지도 잘 알터이니 생략!

83년 10월 아웅산에서 왜 이 "의리"의 경호실장만 살아나고 함병춘,이범석이는 죽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

5공말기 이 "의리"의 안기부장이 남긴 업적은?

85년 DJ귀국 저지 실패

85년 2.12 총선 판세분석 실패 → 신민당 대약진

민한당 공중분해 예견 못함 → 야권의 선명화

용팔이 사건 조종 → 육만 뒤집어쓰고 통일민주당 창당에 조력

87년 박종철 살해 → 직선제 정취 투쟁 가열

87년 이한열 살해 → 6.10 민주화 투쟁

기타 여러 "의리"있는 행동으로

수천의 학생,재아인사를 살해,부상,투옥시킴

머리 나쁜 대통령과

머리 나쁜 마당쇠 하나가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을 피곤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의리"의 표본!

가는 교도소 대신에 소년원에 보내서

"공부"부터 갈쳐줘야 한다감!

2. YS의 배반 50년 (너무 역사적이라 요약 정리)

해방후 일본 학생 귀국때 학교 업그레이드

"통영중" → "경남중"

서울대 청강 수학생 정계진출

(오건 배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어찌 좀 그렇다. 맞아 공부하는 정식 입학생 친구들 배반?)

자유당 말기 당적 변경 → 민주당

수많은 여성 동무들 배반 (혹색 선전 or 사실)

76년 "선명 야당론"으로 신민당 총재 취임 → 박정희와의 영수회담뒤 "4년간 협조"로 변절 → 곧바로 당권 상실(사구라 논쟁)

79년 NYT 회견에서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 희망 → 90년 소련 방문시(민자당 대표 신분) 허담 외교부장에게 "대통령이 허락해줘야 만나지!"

80년 5월 감옥에는 가기 싫어(이학봉 협박) 박권흠을 통해 "정계 은퇴"선언 → "연금" 선택

83년 5.18 3주년을 기해 "단식" 23일 대장정 → 89년 5공청산 합의 "광주 사태는 해결 됐다" → 90년 3당 합당 "5.18이 뭐시여??" →

93년 "문민 정권 수립했으니 이만 끝내지!!!" → 95년 "재발 역사에 맡기도록 하자" 절규 → 95년 스스로를 약간 바로 세움

86년 신민당 해체 통민당 창당 → 정치적 스승인 유진산의 아들(유한열)과 전산계의 2인자(이민우)를 식물인간으로 만들

86년 맹진 뉴스 비난 → 92-96 맹김 뉴스 시리즈 특집

87년 양김 단일화 실패 → "선왕" 노태우를 받들게 되는 인연이 야속타!

88년 통민당 총재 사임 → 물귀신 작전으로 DJ도 사임케함 → 88년 총선 직후 슬그머니 총재 복귀

88년 국보법 폐지 주장 → 96년까지 "원 소리?"

90년 3당 야합, 구국의 결단 → 전두환,노태우 구치소행

92년 "우리가 남이가?" → 95년 6.27 "지역 할거 주의 타파?"

92년 초원 복국집 사건 직후 "오건 순전히 음모일 수 밖에 없다 나쁜 짜수들" → 96년 김기춘 공천 95년 박일룡 경찰청장 94년 정경식 헌법 재판관

(재미로 쓰기 시작한 건데... 기억 나는 대로 쓰다보니 너무나 많다. 이거 YS는 순 "배신,변절과 편입"의 화신 아닌가?)

3. 결론

"의리의 돌쇠"나 "배반의 출렁이"나 사회에 유해하긴 마찬가지다.

결론은 머리가 쏘이러도 있어야한다는 사실!

"다케시마파"와 "꺼정파"의 답변은 바라지 않으니 이만 끝!

DJ방패 <광판>

번호:67409820 등록자:DONGOP 등록일시:96/02/23 10:42 길이:115줄

제목 : [교재] DJ비판의 4단계

DJ를 씬느라 영일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내 귀중한 귀중한 시간을 쪼개 Arbeit을 하시겠습니다.

각자 자신이 어느 레벨에 속하는지 확인해서 뼈를 깎는 수행으로 입생을 늘릴지이다.

요사이 전통적 반DJ성향을 견지해왔던 유력언론들이 DJ와 이회창 사이에서 아직 "베팅"을 못한채 해매고 있는데...

그대들이 더욱 분발해야 4.11후 "대세론"이 확산되지 못할 것 아닌가?

DJ를 가장 잘 아는 내 도움을 받아 최대한 계겨보시라.

워든지 일방적인 것은 안좋은 거니까!

1. 초보단계 : 순수 무식파

이들은 말그대로 무식하다는 점이 자랑이다.

아주 순수하게 지역 감정을 드러내는가 하면(GOODO)

DJ의 얼굴이 음침해서 싫다는 족속(JYDONG)도 있다.

모든 논리가 막히면 "DJ만 봐도 두드러기가 나는데 어떡하나?"(KDW64)식의 지백을 하기도 한다.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한 무식장이들은 거의 모두 이 단계에 속해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동질적인 YS의 통치 기반)

2. 제2단계 : 보수 왜곡파

80년대까지 DJ를 "좌경 용공"이라 칭했던 5,6공 언론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때문에 DJ가 몰려 거주지역으로보수 위장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약간의 지식, 약간의 재산을 가지고 있기에 그 수에 비해 사회적 해악성이 심대하다. 지역적으로는 TK일원,충청,서울의 강남에 집중 분포하며 총선때는 반YS, 대선때는 반DJ 이런식으로 선거를 순 장난으로 치른다. 내가 만나본 ID는 부지기수(MINUOKI,PAFK211,H#8872H...)인데 특하면 욕을 하니 상대 안하는게 좋다.

3. 제3단계 : 개혁 독점파

86년까지의 DJ 업적은 인정하는 편이다. YS시대가 너무 행복하므로 마음 씀씀이도 넉넉하다. 지역적으로는 부산,수도권에 많이 분포해 있는데 3김 청산론이 뭔지도 모르고 해벌떡거리기 일쑤다. 그들이 DJ를 가장 미워하는 사안은 "20억 수수 고백" 왜냐하면, 가만있는 YS를 "대선 자금 공개"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 DJ가 너무 밉다는거다. 가끔씩 DJ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에 YS를 좋아했던 선량한 DJ지지자들(DONGOP)의 YS적개심을 부추기고 있다. 아마 이들은 2년후에 나오는 사람중에 아무나 (가장 DJ에 위협적인) 개나 소나 짝을 군상이다.

4. 고급단계 : 3김 청산파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글머리가 시작된다는거다. "지나번 선거에서 DJ를 찍었지만...어찌고 저찌고...DJ는 하려든 죽일 놈이다." 항상 빛진듯이 YS를 함께 공격하나 실상은 YS 비판적 지지론자라고 보면 된다. 아마 지역감정 측면에서도 "초보단계" 식구들과 막상막하다. 다만, 배운게 좀 있어서 막되먹은 표현은 자제한다고나 할까? 80년대 학번일 경우 학창 시절에 PD계열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백기완"또는 "민중당"에 사표를 던졌으면서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90년대 학번일 경우 주로 오렌지같은 부류들이며 우유는 다우나 아인슈타인을 좋아한다. 이들의 DJ비판은 80% 이상 타당하며 (정계복귀 과정의 무리, 단일 야당 분열) 이들의 "아나"적 속성상 "floating target"이기에 이우재를 때려도 서경석을 때려도 아님 이부영을 때려도 치명상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여타 반DJ부류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논쟁이 막히면 "DJ광신도와는 말이 안통하는데, 무조건 3김 청산이 옳다"는 식으로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실 어찌 DJ비난이 "논리적"일 수 있겠는가? 무조건 "지역 감정"에서 비롯된거지? DJ방패 <광판>

번호:6744/9820 등록자:DONGOP 등록일시:96/02/23 12:36 길이:164줄

제 목 : [교재] 지역 감정의 paradox

오늘 본의 아니게 도배질을 하게 되었다. 저축하는 셈 치고 하는 것이니 너무 불평하지 마시라.

1. 지역 감정의 상식

"영-호남", "평안-함경"간의 지역 대결이 가장 심각하다. 관서와 관북간의 그것은 통일후의 문제겠지만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간에는 적지 않은 문제거리라고 한다. 영남이 원적인 1500만과 호남이 원적인 1200만(추정치)의 인구는 가히 남한 인구의 주력부대라 할만하다. 신라 시대 이후 불교-유학을 차란히 꽃피우며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를 이끌어온 영남과 백제에서도 주변부이었을 뿐이며 5천년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 식량 공급기지 역할로 자족해온 호남은 사실상 라이벌이 될 수가 없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마 DJ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또 영남 신군부의 잔인한 5월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호남인이 언감생심 영남에 대항할 마음을 품었겠는가? 박정희 시대때 벌어진 71년 대선에서 DJ가 호남에서 얻은 지지표 비율은 그야말로 "소박"한 수준일 뿐이다. 지금도 광주같은데를 가보면 느껴겠지만, YS나 전두환을 미워하는 정도가 대구에서 DJ 미워하는 정도의 10분의 1도 안될거다. 광주에 나타난 경상도 사투리의 남자는... 나타난 어메리칸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런데 투표는 왜 이렇게 지랄같이 하는가? 서울에 올라온 호남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이다. 도무지 온갖 고생을 다해서 자식을 키워봐야

출세를 할 수가 없다. 자신들에 대한 호남 차별은 감내하더라도 자식들이 초등학교부터 놀림감이 되는 현실... 그리고 기업체 임원이나 정부 고위직은 바라볼 수도 없는 현실... 이런 삶의 투쟁속에서 "호남 항우회"는 100% 단결이 된다. 전북의 경우 "국민회의" 지지도는 50%선이라는 건 다 아실게다. 전남이나 광주도 80-90%인 곳은 몇 곳 안된다. 그렇다면 호남 인구가 30%인 서울의 서대문구의 경우 그들 중에 "국민회의" 지지파를 70%라 잡더라도 전체 득표율은 20%(0.3 곱하기 0.7) 남짓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30%가 다 나오게 되어있다. 호남인구 전부가 고정표인 것이다. DJ당선이 목적인 "단결"이라기 보다 자식들의 행복을 위한 "희생"이 바로 호남 유폐의 원인이다.

2. 거꾸로 본 지역감정

내가 알고 있는한 호남차별의 주범은 영남인이 아니다. 영남인 특히 PK 지역민들의 경우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동반자 의식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고 TK 지역민들 역시 그 동안의 풍요탓인지 아주 짐잡고 넉넉하다. 반면에 같이 부대끼며 어려운 생활을 했던 서북인,강원인,충청인,경기인의 순서로 무자비한 호남 차별을 행한다. 특히 충청인은 호남 사람으로 오인되는 것이 곧 파멸이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호남 차별의 총대를 맨다. 뭐랄까? 백인 농장주 아래에선 같은 흑인인 "노예 감독"이 가장 악랄한 것과 같다고나 할까? 인구순으로 보면 영남-호남-충청-경기 인데 출세순으로는 영남-충청-이북-강원-호남 이런 순서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영남 정경관군 통치 엘리트의 "지역 분할술"은 너무나 교묘 비호남 민주인사에게 이 700만표를 끄개遡 손자대였뎌 .. 결정적인 반론은 없는 것 같군요. 이곳 워드방이 아닌 다른 토론실에서도 약간의 토론이 진행되었거든요. 봤어요. 지금도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90%씩 뭉치는데, 그 때는 "독립 운동"하는 듯한 비장감마저에 동의할 점이 많습니다. 미래는 "귀속 신문"이 아니라 "능력"의 시대겠지요. 지금도 이런 통신 공간이나 경제 활동 공간에서는 운동다면 그 갈등요인들을 몽땅 용해시킬 수도 있는 "선거 국면"이지요. 한번 까발겨 볼 수 있는 적기입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선택할 지경이라면 대한민국 사회는 북조선보다 나올 것도 없겠지요. 아직 젊은 세대들이 몇개 쉬운 문제였다면 저리 아담법석원할 "지역"과는 다르지요. 또 그 경쟁의 결과가 평생 지속되는게 아니에요. 분명히 약간의 어드벤처를 거의 실력이 같았던 "광주일고", "전주고"에 비해 "경북고", "경남고" 출신이 무조건 우위를 점하는 그런게 문제인거지 직장과 교수사회 그리고 전 "출세"할 가능성은 10%도 안되겠지만... 근데 방개님. 저는 "강준만"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역감정 문웃 (뭐 저도 지금은 이모양이지됐다. 둘째, 이들은 어찌든 기독교충이다. 어지간한 영남인보다는 훨씬 가진게 많으므로 복잡하게 대인 호남의 지식인들중 상당수는 강준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데 ("그렇게 다 까발려서 어쩌자는건가?") 그들이 더욱 이기적이 는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이렇게 기를 쓰고 덤비는 이유는... 상당수의 기죽은 전라도 동향웃峙囉(陰100%지지) 누가 워리카면 "왜 짜샤. 나 하고 싶어 한건데" 이렇게 스스로 당당하게 살면 반은 해결된거 아닙니까? 타 지역민의 반감은 손자대어나 셋더라도 말이죠. 깡주기념한테까지 강요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DJ는 최악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기에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통치 기반의 편중) 그냥 이대로 "호남 문제"는 일단 호남인에 맡기고(내부 정돈) 그냥 이대로 승부를 보는거요. 모든건 운수조관인거고 아마도 이번 역시 DJ는 실패할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호남 조직화는 몇십년은 더 가겠지요. 그 간의 호남 유폐를 자성하는 "개량적" 목소리는 나같은 "꿀장파"의 목소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처부순 호남인만 해도 벌써 10명은 넘습니다.

(근데 우리 아바이 오마니 동무는 총선의 경우 15년째 여당만 찍습네다, 더러워서)
 지금의 정치 풍토 아래서는 "호남은 차들입니다" → "배째라!"
 그러나, 정치 바깥의 문제는 점점 발전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권력 분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속적 균질화는 손자대까지 가겠지만요.
 DJ방패 <광판>

번호:8988/9820 등록자:DONGOP 등록일시:96/04/04 04:21 길이:90줄
 제 목 : <선서>무조건 "선거법"을 지키겠습니다.

1. 우선 전제할 것

종전에 본 T.V뉴스에 따르면 P.C통신상에서 벌어지는 각 후보자에 대한 비방,찬양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 하기로 했다한다.
 원체 우리나라 <하이어나 검,경>이 하는 일이란게 청와대 내실 경호라든지 정권반대파 표적 수사라든지 톨살롱에서 쥐꼬리만한 권력
 향유 등등...
 매우 갑잡은 짓거리만 골라서 해대지만 이번의 "경고"는 사실 심독하다는 생각이 든다.
 생각해보라!
 고것들이 이곳에서 매일 벌어지는 정권반대파에 대한 욕설테러를 문제삼겠는가?
 아니면 2중대를 지지하는 조잡한 잡문을 문제삼겠는가?

■ 권중성씨의 글과 그 글에 대한 반응들

정보통신운동으로 가는 길(JINBO 3) [181/159]
 제 목: 통신인 구속에 관하여 관심이 있으신분!!! 보세요!!!
 올린이: 이광훈(mosoh00) 96.05.05 23:24:10 조회:9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텔에서 토론실 1028 그러니까..
 4월 11일에 있었던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를 받았던 분들에 대한 토론을 정리하고 있는 이광훈(mosoh00)이라고
 합니다.(의장 임상철<Bundy>)

저는 사실 진보적 성향의 사람도 아니고, 이곳에 소속된 단체들에 소속된 사람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아래 정보연대에서 올리신 글을 읽어보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님이 아니라.. 이번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천리안 토론실 38번 방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으며.. 하이텔
 토론실 1028에서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셨으면 하는 군요..(특히 정보연대)

이번 일은 천리안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구속된 김동업님이나 권중성님 모두 천리안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었습니다. 동업님같은 경우 천리안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의견을 여러 글을 통하여 올리셨기때문에 동업님에 대해 인지하고 계시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반면... 중성님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분들이
 모르고 있었죠...

사실 아래 정보연대에서 올리신 글도 그 점에서 실수를 하셨더군요.
 제가 이번 검찰에서 문제를 삼았던 동업님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 글들은 제가 아래 쪽에 글을 올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좀더 알고 싶으신 분은 천리안에서 자유게시판에
 가시거나 나도 한마디에 가시면 많은 글들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성님의 글은 많지가 않기에 모두 올려놓았습니다.
 껌... 아아 읽어보시면.. 기도 안찰겁니다.

우... 아...악...
 이...이...게... 이...것...이... 구...속...이...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겁니다.
 전혀 운동권과는 상관이 없던 제가.. 발벗고 나서는 심정을..
 그리고 이번 일에 관심이 계신분은 천리안이나 하이텔에 오셔서 올라오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천리안에 들어가시면.. 이번 일로 구속 되었다 보석허가를 받으신 중성님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글을 적어가고 있으니까요..
 요즘 토론방향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들어와 보세요.. 천리안 38, 하이텔 1028...
 그럼...
 날자... 자유로..

제 목 : 내가 제일 듣고싶은 뉴스?
 최대의 정치 사기꾼 정상배 김대중씨 숙환으로 사망~!!
 번호:7602/10075 등록자:APECLINE 등록일시:96/03/29 18:13 길이:20줄
 제 목 : 아래 NONGBUGA 아니다 쓰는 자 정신 챙기세요
 김 대중이가 사기꾼이란건 세살먹은 아그들도 아는데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당신도 사기꾼일 수밖에 유유상종 이라고 사기꾼은 사기꾼
 하고 어울리는 뱀이니까
 대중이 씨개가 선관위에 재산 신고 했는것만 봐도 사기꾼이라는건 증명 되질 않겠소
 이 사기꾼에 넘어기는 일부 공민회의 추종자들은 정신덜 처리씨세요달~ 제발
 글고 호남분들 들으씨요
 요번에도 또 호남에서 대중이 줄개들이 구십몇프로 득표율로 싹쓸이 시킬려면 아예 분가해서 독립 하씨요
 김대중씨 대통령 시키구 흥인이는 위대한 지도자 동지로 삼으면 되것군

제 목 : 노수석군의 사망에 대하여
 에라이? 데모하다 똤지면 모두 열사요 민주 투사인감?!!!

제 목 : 김대중 바로보기
 김대중은 1923년 전남 신안군 하의면에서 장노도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그는 훗날 김운해씨의 서자로 입적(김대중은 엄밀히 말해 장대중임)하였다
 김대중은 당시 일본 학생들이 다니던 목포상고를 졸업 목포상선에 입사하였다.
 해방이 되자 이 목포 상선을 인수하였고 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 좌익 이데올로기를 신봉 하면서 정치적인 야욕을 키우게 되었다.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해산되자 건준은 극좌파인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발전하여 각 지역마다 인민위원회를 결성 하였고 김대중은 보다
 강화된 인민위원회에 가담이 조직의 행동대 격인 민주예국청년동맹에 목포 부 위원장으로 맹활약하였다.
 온라인상이라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못합니다.

제 목 : c528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c528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라도를 건드렸는 모양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대중이만 건드리면 이거 거의 개매 같이 달려드니 원?
 C528님 힘내쇼! 침묵하는 다수가 응원 합니다!

제 목 : Good-bye, 지지분한 민주당
 1. 얼마나 "분당 위자료"를 더 내줘야 되는가?
 나는 이리도 민주당이 지지분한지 몰랐다.
 나는 이리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향이 비열한지 몰랐다.
 도대체 언제까지 또 얼마나 더 <김 더럽하기>에 당력을 집중할 것인가?

3.1 탑골 공원에서 열린 민주당 행사 직전에 일부 노인들이 "김대중을 배신한 자들!" 하며 계란등을 집어던졌는데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진상조사 위원회" 구성해서 이들을 발본색원하면 되지 않겠는가...

다짜고짜 "이들을 사주한 DJ는 사과하라" 이런 논평을 장충찬이 시켜 발표해야 옳은 것인가.

이런게 거창한 3김청산의 대대이고 개혁 국민정당의 결성인가?

도대체 이 무지막지한 정당에 대해 실망을 넘어 한탄스럽기조차 하다. 이런 자들과 좀 더 일찍 갈라서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어떠한가...

김상현이 눈물보며 울적해지는 것은 "나의 몫"이지 "그들의 몫"이 아니다.

신순범이 울면서 불출마 발표하는데 대해 나는 정말 정치 무상을 실감한다.

그러나, 신순범이 "시프린스 수뢰"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는다면 또 무슨 악랄한 돌팔매질을 할 것인지 안봐도 훤히 않은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는 피묻은 "하이어나 이빨"외엔 아무 것도 발견할수 없고, 항상 "논리"와는 상극을 달리는 자들이다.

2 사냥개들

우선 신한국당의 감삼재를 보자!

지난7월 DJ의 정계복귀 직전, 어느 시사 주간지에서 감삼재 민자당 기초실장을 인터뷰한게 생각난다.

Q : DJ가 정계복귀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어차피 복귀할 사람인데 지금 이 시점을 택한 것은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다.

그랬던 그가 사무총장에 취임하자마자 최선두에서 "DJ의 정계복귀"를 맹비난하며 개거품을 울게 된다.

민주당의 김용수 부대변인!

작년초 KT탈당 불사를 외치던 이기택의 젊은 잔사다.

이자보다 DJ를 아프게 했던 사람은 아마 88년의 김태룡,92년의 이원종 정도일 것인데...

분당이후 DJ는 김용수의 개밥그릇에 담겨 연일 피범벅이 되곤 했다.

어제 이자가 자민련에 입당했다.

고양을 지역구를 홍기훈이 한테 뺏긴게 유일한 이유다.

도대체 "공천장" 하나에 3김본부로 넘어가는 젊고 깨끗한 희망본부 전사들이 신한국당 인사들보다 나올게 뭔가?

민주당의 장을병 대표!

정치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다.

상대 총장 감투 를 쓰고 있을 때는 썩소리도 못하다가 작년초부터는 은근히 YS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DJ가 정계복귀하자마자

삼성신문에서 빌려준 거대한 3면의 칼럼을 통해 "와이셔츠 바람"으로 정계복귀 선언한 점을 통렬히 공박한다.

(신당 당무회의를 정계복귀 회견으로 착각)

또 얼마동안은 메뉴가 이거였다.

자신도 투쟁했던 "직선제 쟁취"를 DJ가 외면해서 그를 떠난 것이라고...

오즘은 강원도(삼척) 지역 정서상 DJ육을 "누가 누가 잘하나"에 정치 생명을 걸고 있는데 그런 자가... 새시대 새인물?

기타!

이철,노우현,제정구,장기표,이부영,홍성우....

이들의 면면은 화려하나

이들중 어느 누구라도 "반DJ"정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평소에 훌륭한 정치인일지라도 저질 민주당 지지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벌써 신한국당 형님은 저"만큼 앞서 가고 있는데 눈을 시뻘겋게 뜨고 DJ의 약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경쟁이 되는 것이다.

저질들의 경주!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백날해봐야

저질 민주당,신한국당 지지자들(이들은 동질적이다)이 알아주기를 하나?

결국은 지지자들의 수준에 맞춰,

누가누가 잘하나... 반DJ투사 됩기...

3. 이제 남은 빛은 없다.

DJ가 국민에게, 기존의 지지자에게 빛진 것은 사실이다.

(나한테도 빛졌다)

이 빛은 그가 집권하든지 조순이나 정대철을 내세워 집권하든지 하면 청산되는 문제다. 집권후의 보상은 필요없다.

정권 교체 한번 "구경"하는 것으로 "행복" 그 자체다.

그러나, DJ가 민주당에 대해 도대체 무슨 빛이 있는가?

아권분열해서 DJ가 손해본거지, 민주당 인사들이 손해봤나? (이철이 낙선한다면 그는 손해본거지만...)

비전없는 인간들 한50명 공짜로 의원 생활하게 해줬지,

비싼 당사 거저 넘겨줬지,

온통 DJ지지표였던(80%이상) 지방선거 승리탓에 "국고 지원금" 넘쳐나지,

(우리가 던진 지지표탓에 민주당은 60억,국민회의는 30억 받는다)

무엇보다도 "국회 의원"에 굶주린 30-40대 쓰레기들을 민주당 공천자로 만들어줬는데 웬 불만이 그리 많은가?

정계연출신들이 신한국당에 입당해봐야 불과 서너명만 공천받는다.

그에 비하면 민주당 문호가 넓어져서 한 100명은 공천 받을건데 왜 DJ만 뒤달리는가?

그냥 서로 잊자.

나도 어제 장충찬이 <3.1 독도수호대회 폭력시태 진상>발표로 민주당에 대한 나머지 50%의 기대를 버렸으니 민주당도 DJ를 잊고 알아서 잘 커라.

3김 청산하든지, 신한국당과 "구국의 결단"하든지, 아니면 <10-20대 100인> 선언하든지 아무 관심 안보일테니 YS만 기리며 잘 커라. 아니 잘 크기를 기원한다.

정권 교체에 10%도 관심없는 정당이 무슨 놈의..... 끝!

DJ방패 <광관>

5.3.2. 사건 경과.

1996.4.9 하이텔 권중성(APECLINE)씨, 천리안 김동업(dongop)씨 2명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이외 18인의 통신인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1996.5.2 정보연대 SING 입장 발표

1996.5.2 김동업씨 풀려남

5.3.3. 정보연대 SING의 입장.

검찰의 통신 검열과 통신인 구속 과연 정당한가?

■ 들어가며 ...

지난 4월 9일, 서울지검 공안 1부 정진규 검사는 「PC 통신은 다수의 공중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매체인 만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며 천리안의 김동업씨(29. 고시준비생), 하이텔의 권중성씨(37.회사원)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8명의 통신인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김동업씨가 속해 있던 천리안의 「자유게시판」을 중심으로 통신공간상에서의 석방 논의와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며, 이를 인터넷 등을 활용한 대외 홍보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석방을 바란다는 뜻을 통신상에 표명하였으며 「국민회의」에서는 변호사단을 구성 이들의 석방에 힘쓰고 있다.

직접 토론실에 들어가보면, '석방하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간혹 '검찰의 태도를 이해하자'는 반론들도 눈에 띈다. 이번 검찰의 통신 검열과

통신인 구속에 대한 정보연대 SING 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다.

■ 문제가 된 게시물들.

문제가 되었다는 게시물들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번 사태로 구속된 권종성씨의 글은 '김대중씨에 대한 비난'이며, 김동업씨의 글은 이와는 반대되는 입장의 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글들이 문제가 되는 점은 그것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그러한 글들이 선거공간에서 흔히 벌어지는 상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아니며, 통신공간에서 자주 눈에 띄는 -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 일견(一見)의 가치도 없는 욕설과 같은 비논리적 글들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글들은 널리 알려져 인정된 사실들에 근거한 논리적인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것 뿐이다. 이는 김동업씨의 경우 천리안에서 그의 글들을 지켜본 한 통신인의 글에서 잘 드러난다.

「천리안의 dongop(김동업씨의 ID)은 탁월한 식견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그 속에서 널리 알려진 논객중의 논객으로 불리워 왔습니다. 비판과 꼬집음 속에서도 정연한 논리와 이성적인 매너로 그의 글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통쾌함을 건네주고 있었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글들은 감정적, 일방적 비방, 흑색선전이 아닌 글을 읽는 다른 이들과의 논쟁을 기대한, 진정 통신상의 토론공간에 있어 마땅한 게시물인 것이다.

■ 선거기간이 문제가 되었다?

그들의 구속사유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일단 그들은 어떤 정치적 이해 집단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그런 글들을 쓴 의도가 선거공간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현행 선거법은 등록된 선거운동원 이외의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글들은 분명 '표를 얻고자, 주고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했으며, 또한 선거 이전 시기에는 잠잠했다가 선거시기에만 나온 글들이어야 했다. 그러나 그 글들에서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어떠한 내용도 발견되지 않으며, 그들은 선거 이전의 시기에도 토론의 공간에서 활발히 참여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과연 비(非)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과연 무엇이 불법이라는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검찰의 논리는 '선거기간은 예민한 시기이니 입다물고 있어라'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선거공간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라는 물리적 수단을 빌어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는 예민한 시기이니 정치적 견해를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배웠으며,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수단'이라고 배웠다. 이제 와서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인가?

■ 검찰의 개입과 수사과정의 문제점.

'언론의 자유'로 이야기 되는 '의사표현의 자유'는 무척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검열은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군사 독재 시절의 '언론통폐합'이나 '보도지침', '사전검열제도' 등이 얼마나 비민주적이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검열의 명분은 '사회의 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의 보호'라는 것인데, 이는 보다 중요한 대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의 큰 장애가 된다. 이번 사건 이후 통신망에서는 '글 올리기가 무섭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식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 따라서 검열, 특히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검찰이 이러한 수사를 벌였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들의 수사과정은 너무나 가관이었다. 검찰의 수사와 통신인 구속의 의도가 진정으로 '공명선거'라고 한다면, 그들은 꼭 그런 식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기존 언론 매체들의 경우, 선거공간에 있어 편파적 보도 - 의도적이건, 아니건 - 를 한 일이 여러번 있었다. 이러한 경우 방송윤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게 되며, 곧 방송사들은 파란 화면에 사과문을 올리게 된다. 이것은 통신 공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통신망 사업자들은 각 게시물들을 수시로 검토하게 되며, 문제가 있는 글들이 올라올 경우 게시자에게 경고를 주며 공개사과를 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그 사용자의 ID는 삭제가 된다.

검찰은 이 일이 있기 40일 전부터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적으로 볼 때 이는 그 글들이 올라오기 전이며, 따라서 검찰은 사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그 게시물들에 대해 경고를 하고 공개 사과를 유도함으로써 좀 더 나은 공명선거의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 1) 사전에 수사의 시작을 밝히지 못한 것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 2) 경고도 없이 사후에 구속했다는 것은 '본때'를 보여주는 식의 위협한 '합정수사'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 3) '감시'라고 하는 '이른바' 그들의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경고의 시기를 놓쳤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법'은 폭력성을 지닌다고 배웠다. 따라서 그러한 법을 만들 때에는 그러한 폭력성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의 집행은 항상 그 명분을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합정수사는 폭력성을 이용해 명분을 세우자는 앞뒤가 뒤바뀐 법의 집행이다. '교통관련법규'는 '교통질서의 유지'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명분아래 얼마나 많은 폭력, 합정수사가 저질러지고 있는가? 누구라도 합정수사에 당하고 나면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보다 '당했다'고 하는 생각이 앞설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제도이고 법의 목적인가? 검찰이 통신인을 구속함으로써 남은 것은, 그들의 명분이었던 '통신공간내에서의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이 아니라 '통신공간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이다.

■ 통신공간의 성격 규정.

'텔레데모크라시(teledemocracy: 전자민주주의)'다 뭐다 하면서, 통신공간의 중요성, 가능성이 요즘 부쩍 부각되고 있다. 정보연대 SING 역시 이 점을 주목한다. 검찰 역시 이 점을 인식, 「PC통신은 다수의 공중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매체...」라며 통신공간의 중요성과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인식이 과연 완전한 것이었는가? 통신은 물론 기존의 다른 매체들과 많은 유사성을 지닌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언론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 통신공간이 가능성의 공간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이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양방향성'이다. 기존의 매체는 그 채널의 특성상 message의 흐름이 일방적이었다. 그러나 통신공간에서는 message를 제공하는 이가 발신자(sender)인 동시에 수신자(receiver)가 된다. 이것이 바로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것이 통신공간의 '토론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바로 여기서 '텔레데모크라시'의 논의가 출발하고 싶은 것이다. 다시 말해, 통신공간 내에서 어떤 글이 올라오면 그에 대한 찬반의 다양한 글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곧 쓰레기같은 게시물들의 통신공간내의 자정(自淨)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정작용은 어느 정도 확립되고 나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통신 발전 초기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정작용에 대한 시도들이 무척 중요시된다. 통신공간 내의 여러 통신단체들이 이러한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무척 주목해야할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개입 군사정권이 신문, 방송에 했던 것처럼 구시대의 잣대로 칼질을 한다는 것은 진정 통신공간의 특수성을 오인한 것이며, 새로운 공간내에서의 새로운 시대로의 발전의 싹을 잘라버렸다는 점에서 무척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위하여...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번 검찰의 검열과 통신인 구속은 결코 정당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두 통신인을 비롯 불구속입건된 18명의 통신인들은 모두 석방되어야 하며, 검찰은 이에 대한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이 이후의 싸움이다.

- 1) 통신인 구속 이후의 통신인들의 대응은 민첩하고 효과적인 것이었으나 사후약방문식의 것이라 앞으로의 대응을 생각해 볼 때 미흡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을 직접적인 계기로 삼아 통신망을 초월한 범통신인의 연대가 요구된다.
- 2) 통신상의 표현 자유 역시 표현의 책임과 함께 얻어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통신인들은 온라인 상의 토론 문화에 대해 심각히 반성하고 자정의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 3) 이번 사건에서 천리안 등 통신망 사업자들이 보여준 태도는 소비자의 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당하다. 통신사업자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하며, 더 나아가 사용자들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사용자(즉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4) 앞으로 통신검열에 대한 입법활동(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모든 통신인들은 범통신인의 연대를 통해, 또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통신망의 특수성을 담보하고 통신상의 표현 자유를 쟁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모든 활동들에서 정보연대 SING 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1996. 5. 2)

5.4. 해커 구속 사건⁴³⁾에 대하여

■ 사건 경과 및 주변 상황

- 사건의 경과

5월 7일 노정석씨, 조영상씨(이상 kaist 학생) 구속

혐의 사항(검찰 발표):

- 노정석씨 포항공대 bbs인 hite.postec.ac.kr 침투, NFS(네트워크 상의 file 공유 시스템)로 물려 있는 5대의 컴퓨터 hacking, 전자과 워 크스테이션의 eprom에 password를 걸어들. dal1, dal2 system hacking.
- 이 사건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손실되었음. 특히 생명과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것을 복구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음.
- 전자과 교수와 포항공대에서 수사. log file에서 노정석의 ID 발견. 전자과 교수가 고발
- 조영상씨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 소멸 혐의로 구속

- 국내의 hacker 수사 기관

검찰의 특별 범죄 수사부

• 한봉조 검사의 컴퓨터 범죄 수사부

CIC(Center for Information Criminal)

<http://www.sppo.go.kr/> (참고로 이 검찰의 homepage는 구속된 노정석씨가 만들어 주었음)

경찰청의 외사부(인터폴)

• 이정남 경감(hacker 수사대)

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센터

• 이재우 원장과 임채호(전 CERT-KR의 회장이었다가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회장이 됨 그래서 아직 장래가 불투명함)

안전기획부

• 국가 전산망 보안팀(구체적이고 자세한 활동 사항은 알 수 없음)

- 최근의 hacker 사건들

추영호씨 사건

• 작년 7월부터 나우컴, 경성대 등을 hacking

• 한국 전산원의 user password(encrypted) 공개

이것이 고위 공직자들의 암호 공개로 잘못 발표됨

자동차 경비원의 구속과 부산 D고등학교 불구속 입건

•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일본의 웹 사이트를 hacking한 자동차 경비원 구속

• 부산 D 고등학교 hacking으로 불구속 입건

■ 주목해야 할 사실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선 노정석씨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해커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해커라는 사실이다. 앞서의 해커 수사는 노정석씨의 도움이 컸으며, 그는 네트워크 보안의 전문가로서 그동안 이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해온 사람이다. 이를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해커를 잡아야 할 보안 전문가가 되려 해킹'이라며 다소 선정적으로 보도해 왔다. 검찰의 발표와 언론의 보도가 그대로 사실이라면

43. 이 글을 쓰는 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양기창(zomo@romant.c.sing-kr.org)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분명 크나큰 범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그대로 분명한 것이어서 어떤 의혹도 없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많은 설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그는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그가 자신의 ID(대부분의 해커들은 해킹시에 자신의 ID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를 남겨가면서까지 해킹을 하였다는 것은 무척 의심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양 주체인 KAISTI(한국 과기원)과 포항공대는 이전부터 서로 해킹을 해왔음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혹시 이러한 점이 이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추영호씨 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훨씬 뒤인 올 3월에 비로소 발표되었다. 이는 앞에서 밝힌 4개 단위의 창단 시기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복되는 성격의 4개 단위-그것도 모두 창단되지 얼마 되지 않은-가 서로 과열 경쟁을 하게 되어 사건이 확대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된다.

수사상의 의혹점 또한 만만치 않다. 검찰이 아무리 첨단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노정석씨와 같은 해커 수사를 맡기가 수월할까? 이는 곧 검찰의 수사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겨레 21에 실린 기사를 읽어 보는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통신인 구속 사건(12> 통신인 구속에 관하여 참조) 등의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이는 무척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두 사건은 모두 검찰(공권력)에 의한 통신망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불어닥칠 정보 관련 입법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번 노정석씨 사건 과정에서 보여준 민간단체 CERT-KR 수색 등은 검찰이 이미 민간영역을 침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정보연대 SING은 이러한 의혹점들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며 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번 사건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다음의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 21 제 109호 추적

- http://news.hani.co.kr/hankr21/K_965N0109/11_list.html

; 구속 이후 수사의 새로운 의문점을 얻을 수 있다.

한국전보디렉토리(KPD) Issue & Notice 란

- <http://kpd.sing-kr.org/issues.html>

; 정보연대 SING의 관점 및 활동 상황

정보연대 SING BBS

- <telnet://bbs.sing-kr.org> login:bbs

정보연대 SING Mailing List

- <mailto:sing@mail.sing-kr.org>

5.5. 제 3 회 정보연대 SING 워크샵

5.5.1. 지적소유권에 대한 고찰 (고영경)

■ 들어가며

자본주의가 고도화 되고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지식과 정보는 생산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소유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5월 5일의 정보연대 워크샵 주제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적소유권의 역사와 성격에 대한 개괄적 고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 지적소유권의 역사

지식과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지적소유권이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3세기 초 베네치아라고 한다. 당시 상업이 발달했던 베네치아에서는 면직물 공업의 육성을 위해 개인에게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특허권을 명문화 하였다. 이는 점차 유럽으로 확산되어 일반화되었다.

일국적으로 적용되던 지적 소유권이 국제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은 1886년의 베른 협정을 통해서였다. 베른 협정은 문학작, 예술적 작품에 대한 국제적인 저작권 협정으로 국제 지적 소유권 기구(WIPO)를 설치하여 지적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 협정은 몇차례 개정되었는데, 최신 버전은 1971년 파리 개정안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중 지적 소유권에 관한 협정(TRIPS)이다. 여기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source code와 object code 모두)에 대한 저작권 적용을 명시하였다. S/W의 특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특허는 기술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라는 규정은 기술과 지식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

■ 특허권의 목적

특허권의 목적은 다음의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 1) 특정기간동안 배타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대중에 대한정보공개를 장려
- 2) 경쟁자들의 대안적 발명 촉진
- 3) 회사로 하여금 연구 개발비를 회수 가능케 함으로써 투자와 혁신을 장려
- 4) 개발, 발명의 상품화를 촉진하여 대중들이 이를 빨리 접할 수 있도록함

■ 지적소유권의 종류

지적 소유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특허권 patent, 저작권 copyright, 영업비밀 trade secret, 상표권 trade mark가 있다.

특허권 patent는 새로운 발명, 제품이나 과정에 적용되며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권리를 얻게 된다. 전화에 대한 Bell의 예에서 알 수 있듯 먼저 등록된 자에 한해 권리를 인정하며, 등록되는 순간부터 20년간 권리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등록을 위해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독창성을 요구하므로 S/W의 보호에는 적합하지 않다. 저작권 copyright은 문학작, 예술적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시적인 매체로 표현된 것에 한해 적용된다. 창작되는 순간부터 작가 사후 50년동안 보호를 받으며 특허와 같은 등록절차가 불필요하다. 이는 특허와는 달리 고립된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두 시인이 독립적으로 작업을 하여 똑같은 작품을 발표한다면 둘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비밀 trade secret은 미공개된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에 적용되는 것으로 코카콜라의 제조방법이 그 좋은 예이다. 이는 비밀로 유지되는 한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상표권 trade mark은 상품 자체가 아닌 등록된 상표를 보호하는 것으로 먼저 등록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다. 비틀즈가 그들의 앨범을 Apple 이라는 상표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매킨토시 컴퓨터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Apple사는 비틀즈에 30만달러를 지불해야 했다고 한다.

■ S/W와 지적소유권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 S/W는 독자적인 상품이라기 보다는 하드웨어에 끼워주는 인센티브로서의 성격을 가졌으므로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첨예하지는 않았다. 초기에는 영업비밀, software license agreement 가 법적 보호의 수단으로 선호되었다. 그러다 S/W자체가 거대한 시장을 가진 독자적인 상품이 되면서 기밀유지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copyright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각국의 입법 사례로는 '영국 : Design & Patent Act (1988)', '유럽 : EC Software Directive (1993)', '미국 : federal Copyright Act (1976)'가 있다. 그러나 S/W 산업에 대한 저작권의 적용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다.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source code, object code 모두를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규정이었다. 이는 많은 논쟁을 거쳐 모두 보호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최근에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문제로 대표되는 비문자적 구성요소에 대한 저작권 적용 여부이다. 저작권은 가시적인 매체로 표현된 것에 한하여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표현된 것에 한하여 보호할 뿐(source code, object code) 그 밑에 깔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러나 S/W의 경우 이 표현과 아이디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메뉴 구조나 직관적 인터페이스 등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하는 요소에도 저작권을 적용하여 보호할 것인가를 놓고 S/W업체들간의 분쟁이 빈번히 일어났다. 다음은 지적소유권을 둘러싼 분쟁 중에서 유명한 사건의 목록이다.

- Whelan vs Jaslow(1986)

목적과 기능 등 가장 일반적, 보편적인 진술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를 표현으로 간주, copyright 적용, 표현만 보호한다는 것을 인정하나 표현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

- Computer Associates International vs Altai screen display에 관한 소송(1992)

- Apple vs MS, HP(1988)

look & feel, GUI(graphic user interface)에 대한 유명한 분쟁. 1994년 가을, 침해 아니라고 결론

- Lotus vs Borland(1992)

볼랜드사의 퀘트로 스프레드시트가 로터스사의 로터스 1-2-3의 메뉴구조를 모방했다고 로터스가 볼랜드를 제소한 사건. 하급법원에서는 로터스가 승소했으나 상급법원에서 볼랜드가 승소했다.

이상의 판례에서 표현된 것에 한하여 보호한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현과 아이디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분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reverse engineering의 허용 여부이다. reverse engineering이란 원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위해 바이너리 코드를 분석하여 소스 코드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컨대 MS-Windows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windows의 구조를 알아야 하므로 reverse engineering 이 필수적이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불가결한 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통념화 되어있으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안고있다.

기존의 저작권 개념을 S/W로 확장하는 것이 이렇듯 많은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S/W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Sui generis)도 있었다. S/W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입법을 하자는 것이나 반응은 부정적이다. S/W 보호가 저작권으로 일원화되는 경향에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혼란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또한 매체융합, 멀티미디어화의 경향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놓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저작권이 아닌 개별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멀티미디어화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reverse engineering에 대한 명시적 허용규정이 없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 정리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일단 지적소유권 관련 법안 자체가 필요(누구의?)에 의한 역사적 산물이다. 둘째로 지적소유권의 적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컴퓨터 S/W의 경우 reverse engineering 등 그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거대 자본의 특허권 독점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지적소유권은 개발자 보호와 사회적 효용의 증대라는 본래의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지식과 정보에 배타적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copyright에 대한 대안으로서 copyleft가 부각되는 것이다.

5.6. 대학생신문 기고글

5.6.1. 인터넷과 암호화 기술 (이건호)

인터넷과 관련된 관심사 중에 근래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단연 '보안'과 '암호화'이다.

보안문제에 대해 가장 신경쓰는 곳은 역시 인터넷 상의 '전자거래'를 위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취급해야 하는 기업들이다.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시작된 온라인 거래는 주로 신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번호와 신상명세가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존재하고 또한 시간-공간의 제한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먼저 장악하기 위해 자본의 노력은 확실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그와 함께 좀 더 편리한 결제 수단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되고 있다.

96년 2월 6일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를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s)란 이름의 보안표준안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넷스케이프, RSA데이터 시큐리티 등은 좀 더 완벽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더 나아가 사이버캐시는 실물화폐처럼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고, 결제 과정이 모두 인터넷 내에서 수행되는 E-Cash의 실용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ttp://www.cybercash.com>)

이러한 자본의 움직임과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보안과 암호가 문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연방 정부가 컴퓨터통신을 가로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PGP(Pretty Good Privacy)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개했던 필립 짐머만이라는 미국의 프로그래머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고급 암호화기술이 군사 기술로 취급되어 외국으로의 유출이 엄격히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짐머만은 무기의 불법 유출에 대한 혐의를 쓰고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얼마 전의 재판에서 짐머만은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으며, 그의 변호사는 '정부가 이러한 공개적인 조사를 철회한 데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PGP는 국내버전과 국제버전으로 나뉘어 배포되고 있으며, (<http://web.mit.edu/network/pgp.html>) 우리나라의 상용통신망에서도 국제버전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래머가 PGP를 한글화하여 재배포하려 했다가 안기부의 개입으로 공개를 미루고 혐의 중이라는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다. 이유는 불문 정보가 암호화되어 유통될 수 있다는 것. 네트워크와 사람들의 접점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사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고급 암호화기술이 필수적이다. ('공개된 고급 암호화기술'이라 함은 누구라도 쉽게 자신의 정보를 암호화시킬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이 암호를 깨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말한다.) 물론, 전자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암호화기술에 대한 연구도 개인의 신상정보의 누출을 막기 위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의 장악'과 '안정적인 지위 구축'이며 따라서 암호화기술은 독점된다. 또한 그들에게 '안전하게' 들어간 정보는 아무도 모르는 채 '안전하게' 어디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

개인의 사적 정보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며, 그것은 단지 '전자결제' 과정에서만 '회사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5.6.2. 이번 해커 구속 수사의 문제점 (안유석)

포항공대의 시스템에 침투했다는 이유로 4월에 노정석씨가 구속되었다. 포항공대 측에서는 몇몇 시스템 파일과 5대의 워크스테이션을 완전히 마비시켰다고 한다. 그 결과로 포항공대측에서는 연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생명과는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소요되었다고 한다. 결국 포항공대측의 고발로 kaist의 노정석씨가 구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kaist에 들어가 시스템의 정보를 지위 증거를 없애려고 한 조영상 씨를 추가로 구속했다. 그러나, 포항공대측의 이러한 주장에 비해 이번 사건은 그 배경에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기존의 해커구속 사건과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존의 해커범죄로 구속된 해커는 고등학생, 혹은 전혀 색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구속된 노정석씨는 국내 네트워크계에서 보안 전문가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업계, 민간 네트워크 보안 조직 등에 상당한 공헌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호스트를 경쟁적으로 침투해 왔던 KAIST와 포항공대의 알력관계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설도 제기된다. 또한, 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의 해커수사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은 해킹, 및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지식이 전문하므로, 주로 민간 기관, 개인에 의존해 왔고, 주로 자백위주(?)의 수사를 펼쳤으며, 해커 범죄의 죄질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 그러한 까닭에, 시기에 따른 정치적인 상황하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죄질에 비한 형량부과가 원칙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검찰, 경찰, 안기부(비밀리에 해오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함) 등으로 나뉘어져 각각 해커수사 및 네트워크 관련 조사팀이 꾸려진지 1년이 거의 다된 시점에서 그간 무리한 실적 경쟁을 해오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게다가 선거시 통신망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권종씨와 김동업씨의 예나, 이번 해커 구속 수사 등 특정방송사에서는 위의 사건들을 방영한후 최근 좌경학생들이 통신망을 선전선동의 공간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보도를 한 것은 통신 공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태의 입법과정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더구나, 그간의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특히나 해커에는), 그들의 긍정적인 측면들, 이를테면 업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이는 그들의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공헌, 자발적인 여러 소프트웨어의 개발등의 open network의 정신, 한국의 통신 인터넷 초창기의 기여도는 상관없이 해커를 범죄자로 일반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는 점과 그것으로부터 검찰에 검찰의 칼자루를 주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과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CERT-Kr(한국 네트워크의 민간 보안 전문 기관)의 기계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검찰의 태도는 민간영역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번 노정석씨 구속건은 검찰의 통신망, 네트워크에 대한 관점이 구시대의 검열논리에 깊숙히 뿌리박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민간영역에서 스스로 자율적인 통제권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7. 통신연대 월례 포럼 정리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참세상 아이디입니다.

01410 대책회의 : 이동영(014xy)님 // 노동문화연구포럼 : 황승하(nowlabor)님 //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 이오뜸(k2barun)님 // 얼터너티브 : 이혁수(알트넷)님 // 정보연대SING : 오병일(SING)님 // 찬우물 : 이현승(나우:이드)님 // 참세상 : 김형준(smallake)님 // 현대철학동호회 : 김바로(zspt)님, 김영선(천리안:ANAKI)님, 박소연(천리안:philonia)님, 박찬수(ghostman)님

5.7.1. 4월 주제를론

<보편적 서비스와 01410>의 주제로 네 번째 월례포럼을 가졌습니다. 먼저 "01410 문제에 대해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제기하면서"라는 주제로 통신연대의 게시판지가 발제를 하였고, 곧이어 "우리나라 PC통신 요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01410 대책회의 이동영님께서 하셨습니다.

사회는 참세상에서, 서기는 얼터너티브에서 맡아 주셨습니다. 발제문과 대책회의의 활동방향성에 대한 토론이 약 1시간 가량 벌어졌는데, 그 내용에 관한 정리가 곧 게시판에 올라올 것입니다. 01410 접속료 부과에 관한 문제제기와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01410 대책회의와 4월 월례포럼을 함께 준비하면서 통신연대에 부족한 점도 많이 느꼈고 배운 바도 많았습니다. 4월 월례포럼 과정에서 토론에 참가한 회원들은 이 부분을 동의하였고 열심히 활동하는 대책회의에 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01410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는 각 동호회 개별 지지도 가능하겠고, 무엇보다 통신연대에 참가하고 있는 동호회들은 함께 사회적으로 평등한 정보 접근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5.7.2. 5월 월례포럼 준비

4월 월례포럼에서 제기된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는 "어느 지역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며, 요금에서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보편적 서비스는 전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개념으로서, PC통신에 고스란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월례포럼에 참가하였던 많은 분들이 토론 과정 속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PC통신에 적용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확장 적용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월례포럼은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한 '퍼블릭 어세스'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퍼블릭 어세스(public access)'는 거칠게는 '공공 접근권'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발제는 정보연대 SING과 얼터너티브에서 공동으로 맡아주시기로 하였고 날짜는 5월 25일입니다.

* 5월 월례포럼 날짜 : 1996년 5월 25일(토)

얼마전 한 고등학생이 몇년간 줄라도 부모님께서 컴퓨터를 살 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한 것을 비판하여 자살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애들이 촌놈이라고 놀려서 견딜 수가 없다"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가슴에 깊은 못이 박힌 그의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 두달치 월급은 훌쩍 날아가는 컴퓨터를 사야만 합니까? 정보가 필수적인 사회가 도래한다면, 웅당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 장치들이 갖춰지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일 것입니다. 약간 낯선 개념이긴 하지만, '퍼블릭 어세스'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회원들이 제기하였던 바대로 "조금씩이라도 입장 표명을 공식화해나가자"는 노력을 다섯번째 월례포럼부터 실시할 것입니다. 통신연대 반년만에 다시 사회적으로 발언할 실천의 씩이 보인다고 할까요?

5.7.3. 컴활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컴활'에 관한 작업은, 그 취지에 대하여 공감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컴퓨터를 사회운동에 쓰기 위한 제대로 된 매뉴얼부터 만들어보자'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지난 4월에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컴퓨터교육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보연대 SING에서 개별적으로 바쁘게 교육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통신연대에도 간혹 이 부분에 대한 의뢰가 들어올 조짐(?)입니다. 활동 기획을 추진중인 정보연대 SING에서 조만간 매뉴얼 작업에 대한 기획안을 제출하면 단체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가합시다.

활동하면서 정보통신운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5.7.4. 맥브라이트 학술회의

현재 3번 게시판에 참세상 김형준님께서 맥브라이트 학술대회에 대한 소개를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 중 정보통신에 관한 부분에 있어 통신연대가 토론자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월례포럼의 성과를 가시화시키고,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문제제기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3번 게시판을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Vol. 1. #5

- b.1. 편집자의 변 218
- b.2. SING is ACTing! 218
- b.3. 자본주의, 탈자본주의적 소유형태 221
- b.4. 정보가 공유되는 사회를 위하여 228
- b.5. 대학생신문 기고글 231
- b.6. 번역문(노동정보화사업단 김성원) 233
- b.7. 통신연대 워크숍 포럼 정리 235

6.1. 편집자의 변

'정보'라는 화두를 가지고 SING A SONG이 나온지 언 반 년이 지났다. 어느덧 우리 사회에서 '정보'라는 단어는 무척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 같다. 수많은 신문, 잡지, 방송들이 '정보'를 경쟁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정보연대 SING의 활동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정보'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굳이 '양-질 전환의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런 무수한 논의들이 서로 충돌하고 다듬어지는 가운데 정말 가치있는 논의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SING A SONG은 변신하려 한다. 그것은 물론 기존의 SING A SONG에 대한 철저한, 때로는 가혹한 자기반성을 필요로 한다. SING A SONG은 '정보'에 대한 열린 논의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기존의 Text 매체가 가질 수 없었던 Multimedia적이고 동시에 Interactive한 매체를 통해 거듭 태어나려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신은 단지 외형적인 변신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좀 더 다른 매체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

SING A SONG은 기존의 다른 매체들이 그러는 것처럼 '유행처럼' 정보를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SING A SONG은 철저한 활동가들의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 담론'들의 활동가적인 표현 그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SING A SONG이 이러한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편집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보다 효율적인 편집 시스템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따라서 SING A SONG vol.1은 이번 호로 마감된다.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vol.2를 열어가야 할 것을 약속한다. 그동안 부족한 이 공간에 글을 써 주신 많은 필자분들과 또 그러한 글들에 반응을 보여 주신 많은 독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끝으로 본인의 손가락과 머리에도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6.2. SING is ACTing⁴⁴⁾!

- '96 전반기 결산과 향후 활동 방향 토론회 및 새 운영진 선출 -

■ M.T. 개관.

일시 : 1996. 6. 29 - 7. 1

장소 : 강원도 홍천 환경운동연합 연수원

정리 : 박승렬

■ 현재 SING의 활동 상황 점검.

• 외부 연대 사업

- 맥브라이드 라운드 테이블 정보통신 세션
: 8/24-27 서울 호암 개회, 한국방송학회 주관

- 워크샵 발제와 패널리스트 섭외

- 메일링리스트 개설

- 사회단체 정보화 및 KNN(KOREA NGO NETWORK) 기반 설립 추진

- 연대단체: 환경연 시민환경정보센터, 열린정책회의 - 지식인연대 영상정보 통신위원회 참가

- 홈페이지 설립 추진

- 메일링리스트 개설

44. 이번 #5호에서는 정보연대 SING의 총 M.T. 정리글을 실어 보았습니다. 지난 기간의 반성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관한 논의입니다.

- 통신연대 : 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모임 추진
- 통신검열백서 발간 추진
- 연대단체: 한과청, 바롱모, Alternative, 찬우물...
- 서울대 자치도서관 서버의 자료검색 및 운용 SOFTWARE 개발 - 전노협 백서 발간위 지원

• 이슈별 네트워크 홍보 및 토론 web 개설 및 추진상황

-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침탈사건 web,
- 외국인 노동자 협의회 홈페이지 추진
- 덕유산 환경과피 관련 홈페이지
- 반핵 아시아 포럼 web 추진
- 푸른영상 구속대책 관련 홈페이지 추진
- 김상태씨 저서 [sex라는 기호를 다루는 사람들] 홈페이지 추진
- 성담론에 대한 점검 및 여성단체의 네트워크 설립추진 - 사회과학 네트워크(SSN)개설 추진
- 사회과학 학술단체, 교수진, 대학원, 학교 네트워크
- 자료 DB 화 및 검색틀 개발

■ 활동 현황에 대한 반성 및 향후 전망 토론

• 사전평반 및 문제점 진단

- 일의 기획과 실무진행의 편중 / 토론 및 역할분담이 원활하지 못함
- 소통의 네트워크화 및 메일링리스트의 효율적 사용이 필요
- 개인적 사정에 의한 활동부진이 서로에게 주는 부담감의 조절이 필요
- 만성 적자인 재정난의 타개를 위한 혁신책 필요

• 발제1(SING의 체제개편논의에 앞선 원칙 - 임원철)

- 활동가 그룹의 상으로의 강화 -> PD제
- 한 사안에 대한 기획과 정보수집, 조직화, 실무작업이 한 사람 혹은 TEAM에 의해 완결되는 형태로의 전화.
- MANIA적인 활동
- 적극적으로 자기 관심분야를 넓혀가며, 자기정체성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
- 자기 관심영역을 고집하며, 폐쇄적인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의 지양
- network의 끝에서 새로운 network의 시작을 열어가는 적극적인 NETWORKER
- 외연의 확대를 NETWORKER적인 활동으로, 내포의 깊이를 MANIA적인 활동으로, 계몽의 방법으로라도 드러내고, 자기반성의 원칙으로 자신을 변화시킨다.

■ 발제2(SING의 진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 - 안유석)

- 시민/사회/노동/변혁 운동의 네트워크 활용에 초점을 맞춘 운동과, 사이버 공간 자체의 대안적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실천하는 운동 사이에서의 모순지양 및 실천적 지향으로부터의 논의 출발.
- 다양한 영역의 네트워크화와 이에 기반한 실천적 연대 조직화의 필요성 및 당위에 불구하고, 여러 운동의 나열식 활동으로 축소되고 집요한 전문성에 대한 집착이 느슨해짐에 따른 진부화, 기성화에 대한 경계 및 반성
- 삶의 총체성과 운동의 실천력을 담보해 나갈수 있는 온라인 정치집단으로서의 자리 매김에 대한 제언 및 원칙에 대한 토론제안

■ 토론

- 활동가로서의 적극적 자세 -> NETWORKER/MANIA적 활동의 합의와 긍정성에 대한 합의와 소통의 실천적 네트워크화에 대한 노력의 배가
- 조직의 위상 설정에 있어 근본적인 정체성을 심화/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선불리 삶의 다면성에 대한 논의 확대와 정치집단으로서의 전화를 이야기할 때 따르는 스스로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질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
- 우리의 위치에 대한 계급적 인식에 대한 토론
- 일을 처리하는 원칙
- 유연적 필요에 따른 사안별 대처를 공세적으로 전화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노력.

■ 인터넷 커뮤니티(이하 IC)의 운영원칙에 대한 제언(오병일)

- SING의 관리하에 SING의 활동역력에 따른 운동적 사업체로서의 규정.
- 내적으로 고용관계로서 유지되지 않는 '노동자조합주의(?)'의 현실화.
- 지분이 비례적 분배권을 의미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균등한 분배와 공유자산의 확대
- 생활, 문화 조합주의로서 사적 소유에 의한 낭비를 막으며 새로운 생활형태의 조직
-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단법인화.

■ 7-8월중 내부 교육과정 계획

- The Road to Web Master (이혁, 박인성)
- 정보운동연역에 대한 이론/실무 (안유석, 임완철)
- 시스템 관리 및 개발을 위한 기술교육 (안유석)

■ 운영진 선출

- 대표 : 안유석
- 간사 : 오병일, 이혁, 엄귀영, 이건호, 박인성, 임완철

■ 역할책임

- KPD 개편(이혁, 김상헌)
- SSN 추진(오병일, 임완철)
- 지식인연대 영상정보통신위(오병일, 이혁)
- 맥브라이드 라운드 테이블(안유석, 박승렬)
- 전노협백서발간위(이건호, 안유석)
- 성남외국인노동자 및 외노협 web 지원(김상들, 박상린) - Internet Community web (박인성, 이정섭)
- 서울대학원신문 web (김상들, 박인성)
- 통신검열백서발간(안유석, 김지호)
- 대학별 정보부문 단체 및 동아리 지원 및 네트워크 (김지호, 고영경, 안유석)
- 국내외 여성운동단체 conference (김지현, 엄귀영) - 자치도서관 프로젝트(이건호, 안유석)
- Sing A Song 발간(박인성, 엄귀영, 김지호)
- 정보부문 정책 및 이슈파이팅 (박승렬)

6.3. 자본주의, 탈자본주의적 소유형태 그리고 COPYLEFT⁴⁵⁾ (허진영)

■ 들어가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별다른 고민없이 지나쳐 버렸을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당신이 어느날 재미있는 책을 하나 샀다고 하자. 그 책을 밤새도록 재미있게 읽은 당신은 다음날, 등교길에서 만난 당신의 친한 친구에게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평소 책에 관심이 많은 그 친구는 당신에게 그 책을 빌려달라고 하고, 당신은 흔쾌히 승낙을 하고 다음날 그 책을 친구에게 빌려준다. 그리하여, 당신의 친구도 또한 그 책을 재미있게 읽게 되고 잠시나마 지루하고 딱딱하기 그지없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지금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자. 당신의 친구는 불행하게도? 책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책을 사기에는 경제사정이 넉넉지 못하다거나(아직까지는 책값이 큰 부담이 되진 않았지만 요즘에 갑자기 치솟기 시작한 책값은 많은 책벌레들의 주머니사정을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책값만의 문제가 아님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믿는다.), 그 책의 전체보다는 일부분만이 특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당신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렇다. 복사라고 하는 해결책이 있다. 물론, 길표지는 본래의 책보다 못하겠지만, 활자부분은 본래의 것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품질을 가진 책을 값싸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주위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명백히 저작권에 저촉이 되는 행위이다. 여기까지 따라온 당신은 "하지만,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상업적인 목적의 불법복제는 막아야 하지 않은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문제가 너무나도 간단하고 자명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묻는 것은 어찌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하지만 당신에게 다시 묻는다. 그것은 왜 자연스러운가? 억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당신에게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다.

작년 말, 인터넷상의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Being Digital」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출판되었다. 물론, 책 그 자체로는 다른 책들과는 별로 다른 점이 없었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책의 전체내용이 디스켓에 담겨져서 팔렸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페이지까지 책과 똑같은 형식으로 hwp파일로 편집이 되어서 말이다. 이와 같은 경우, 위와 똑같은 가정을 해 보도록 하자.

이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디스켓에 담긴 컴퓨터파일이라는 매체의 변화는 책의 복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형적인 불법복제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별다른 비판적인 목소리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운영중에 가지게 된 컴퓨터복사에 대한 죄의식은 너무나도 간단한 COPY명령어와 앙심사이에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책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앞으로의 상황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정보혁명, 디지털혁명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는 앞으로 어쩌면 매체-1 관련된 우리들의 생활습관 하나하나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간단한 컴퓨터파일의 복사과정인지 아니면, 그것을 비양심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사회적 제도인지를 논의로 한다면 말이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한 번 살펴보자. 도대체 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출판업자들의 이윤을 위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의 본래적 의미는 보다 많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특허제도나 저작권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철학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전같이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는 작가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유인기제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사회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데 적합한 제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복사기술이 발달하고, 컴퓨터에 기반한 새로운 매체혁명이 일어나 정보처리기술의 일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재의 기술적 여건하에서는 오히려 저작권제도는 그 순기능보다는 그것의 역기능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현재 저작권 제도는 본래의 목적인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몇몇 집단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또한, 최근의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일련의

45. 동아대 교지 기고글

46. "현대 거대 다국적 기업은 자선의 독점점 이익의 관철과 권력의 재생산을 위해, 지적 재산권의 전세계적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후발업체에 대한 폭력적인 착취에 기반한 거대 다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며, 중북투자에 의한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다." 정보연대 SING 강령, 중에서

조치를 살펴보면 이러한 집단들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⁷⁾. 따라서, 지적재산권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저작권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사회적 관계의 메카니즘일 것이다.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보다 역동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GNU의 COPyleft운동이다.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복사, 수정 등의 권리에 대한 기존의 저작권의 제한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복사하고, 또한 자유롭게 프로그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인 도구로서 COPyleft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지적재산권에 반대하는 COPyleft운동을 소유형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약간의 우회를 거친다. 먼저 자본주의적 소유형태와 탈자본주의적 소유형태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본 다음, 그러한 맥락에서 COPyleft운동의 체제대안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 자본주의적 소유형태

자본주의적 소유형태에 대한 분석을 함에 있어서, 흔히 근대 소유론의 입법자로 지칭되는 로크와 대표적인 근대 철학자인 헤겔의 관점을 개괄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논의전개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그들의 관점을 정리해 본 다음 자본주의적 소유형태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로크는 자연이란 어느 누구의 것에도 속하지 않는 공유의 상태임을 전제하고, 그러한 자연의 일부를 나의 것, 즉 나의 소유로 취할 수 있는 소유권 발생의 근원을 자기의 노동에서 찾는다⁴⁸⁾. 다시 말하면, 공유 상태인 자연에 나의 노동이 첨가됨으로써 나의 소유물이 생겨나고, 나의 노동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나 자신의 고유한 신체 및 정신활동을 통한 것이므로 나의 소유는 정당화될 수 있다. 로크에게서 노동은 그의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자기노동은 원칙상 양도할 수 없는 자신의 소유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노동의 양도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노동력의 상품화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⁴⁹⁾.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비판대로 로크의 이러한 '자기노동에 기초한 사적 소유'라는 태도는 그 관념적 성격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성을 법적인 평등관계로 은폐하는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타인노동에 기초한 소유'를 은폐하는 것으로 전화하게 된다⁵⁰⁾.

이러한 유사성은 헤겔에게서도 발견된다. 헤겔은 소유를 인격 실현의 한 계기로 보았으나 로크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양도를 인정한다. 그는 인간 모두는 "타인들에 대해 나는 본질적으로 나의 신체 속에서 자유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특수한 신체적, 정신적 재능과 활동 능력에 있어 나는 그 개별적 생산물이나 시간적으로 한정된 재능과 능력의 사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로크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상품화에 대한 암묵적인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그는 각 개인들의 소유물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측면으로 구분을 하고는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교환가치는 '양화된 유용성'일 뿐 어떠한 객관적 기준도 제시해 주지 못한다. 결국 이것은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적 소유자들 사이의 교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착취적 성격을 은폐시키기에 충분하며, 기존의 사회를 원칙적으로 정당하고 이성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헤겔의 시민사회관에 기여할 뿐인 논리였다⁵¹⁾.

47. 남한에서는 쌀수입개방의 문제로 시끄러웠던 UR협상의 경우, 미국과 유럽사이에서는 음반 및 비디오, 컴퓨터소프트웨어등의 시장을 둘러싼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로 다루어졌었고, '지적재산권 강화'의 문제는 WTO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관철된다. 또한, 얼마전에 전면적으로 맞붙은 미국과 중국간의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무역마찰은 이러한 과정을 여실히 드러내어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48. "대지와 인간 이하의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신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J. Locke, 『시민정부론』, 연세대출판부.

49. "나의 하인이 잔디밭에서 뜯어 온 냇장은 ... 나의 소유물로 된다." J. Locke, 앞의 책.

50. "소유권이 이상한 과정을 통해 이제 자본가의 측에서는 타인의 생산물에 대한 권리로, 그리고 노동력의 측에서는 자기 자신의 노동 내지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타인의 소유물로 대해야 하는 의무로 변증법적 전화를 겪는다는 것을 목격한다." K. Marx, Grundrisse, 여기서는 박영욱, 마르크스의 소유이론, 계간 『시대와 철학』에서 재인용

51. 이상까지의 헤겔에 관한 논의는 Hegel, 『법철학강요』(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로크와 헤겔의 소유론에 관한 논의는

이상의 로크와 헤겔의 소유론으로부터 알 수 있는 부르주아소유론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로크의 '자기노동에 기초한 소유'나 헤겔의 '인격의 계기로서의 사적 소유'가 실질적으로는 '타인 노동에 기초한 사적 소유'나 '소외의 계기로서의 사적소유'로 전화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소유의 문제를 경제적 불평등의 차원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 대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관계에 집착하는 법률적 관계에서만 파악함으로써 현실과정(경제적, 사회적 관계)에서의 총체성을 결여하여 결국 관념론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유론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일반적, 보편적, 초역사적 규정으로 제시한 사적 소유의 원칙들이 실은 특수한, 역사적으로 한정된 특정한 한 시기(자본주의 사회)의 소유론의 일반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한다⁵²⁾.

위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역사적 소유형태로서의 자본주의적 소유형태의 특성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자. 자본주의의 소유형태를 논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의 하나는 자본주의적 소유형태를 '사적 소유'로만 규정하는 것이다⁵³⁾.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사적소유/공동소유라는 범주만으로는 서구의 전 역사가 공동소유(원시공산제) → 사적소유(고대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라는 도식으로 단순화되며, 자본주의 소유형태의 특수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불가능해지고 만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적소유인자 공동소유인자를 따지기 이전에 자본주의사회의 지배적인 소유권 - 부르주아적 소유권 - 이 가진 특수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이를 고대의 노예제하에서의 소유권과 비교를 해 보면, 부르주아적 소유권은 인신에 대한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봉건제하의 소유권의 경우는 간단하게나마 봉건장원을 고찰해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장원에서 생산수단은 물론 영주의 소유이다. 이것은 부르주아의 소유권과는 다른데, 영주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가 생산수단과 생산물(지대형태의 잉여)에 대한 처분권 - 협의의 소유권 - 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농노는 물론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농노는 관습법에 따라 생산수단에 대한 점유권(사용권)을 보장받으며, 뿐만 아니라 영주의 직접 통제 없이 노동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노동통제권을 보유한다. 즉, 봉건제 하에서 '소유권'과 '점유권'과 '노동통제권'은 서로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부르주아적 소유권은 소유권자에게 협의의 소유권(생산수단 및 생산물의 처분권)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점유권과 노동통제권의 행사도 보장한다. 즉, 부르주아적 소유권은 점유권(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용권, 소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해고권)과 노동통제권을 포함하는 '유별난' 소유권인 것이다⁵⁴⁾. 부르주아적 소유권을 위와 같이 정의할 때, 이제 남은 문제는 그것의 구체적인 사회적 존재양태, 즉 소유권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적소유/공적소유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논의의 수준을 넘으므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사적소유는 소유권자와 생산수단 점유자(사용자, 곧 노동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로, 그리고 공동소유는 소유권자와 생산수단 점유자가 일치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의 소유형태는 부르주아적인 소유권에 기반한 사적소유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 속에서 이를테면 구 소련에서의 국유기업을 노멘클라투라의 사적소유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공식마르크주의에서 애써 왜곡시켰던 노동통제권과 관련된 권력의 문제, 노동의 소외의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지금까지의 논의했던 자본주의적 소유형태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로크와 헤겔로 대표되는 부르주아소유론자들의 한계는 특수한 역사적 시기인 자본주의 사회의 소유론을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소유론으로 정당화했다는 점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주의적 소유형태의 특성은 부르주아적 소유권에 기반한 사적소유라고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부르주아적 소유권이라고 함은 소유권자가 협의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점유권과 노동통제권을 보유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적소유라고 하는 것은 생산수단의 점유자와 생산수단의 소유권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지적재산권을 자본주의적 소유형태의 측면에서 파악해 보자. 지적 재산권은 자신의 정신적 노동을 바탕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하지만, 결국은 정보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정보생산자에 대한 해고권과 노동통제권을 가진 자(즉, 부르주아적 소유권자. 이를

박영욱, 위의 글 참조.

52. "각각의 역사적 시대에서 소유는 서로 다르게, 그리고 일련의 완전히 다른 사회관계하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소유를 정의한다는 것은 다른이인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든 사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독립된 관계로서 별개의 범주, 추상적인 영구적 관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형이상학적 또는 법률적 환상일 뿐이다." 마르크스, 철학의 빈곤.

53. 이하의 자본주의적, 그리고 탈자본주의적 소유형태에 관한 논의는 이범, 자본주의 소유형태와 탈자본주의 소유형태, 서울대 교지 『관악』, 1993년 가을호에서 대부분 인용됨.

54. 발리바르에 의하면, 맑스는 자본론 1권에서 협의의 소유권과 관련된 전유(appropriation)를 '소유권'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노동통제권과 관련된 전유를 '실질적 물건 전유'관과 결부시켰다고 파악한다. 즉, 전자는 소유권자가 생산물을 자기 것으로 한다는 의미이고, 후자의 것은 소유권자가 노동과정을 통제한다는 의미이다.

55. 알튀세르 E. 발리바르, 『자본론을 읽는다』, 여기서는 이범, 앞의 글에서 재인용.

정보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정보소스의 축적인 데이터베이스와 그것의 소통을 보장하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느정도의 정보생산 장비를 가진자를 말한다.)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에 지나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수 있다.

■ 탈자본주의적 소유형태를 위한 마르크스주의 이행전략

이상에서 살펴본 자본주의적 소유형태, 즉 부르주아적 소유권에 근거한 사적 소유는 '정치'와 '경제'의 절대적인 분리를 초래하며, 이것은 자본주의적 국가의 폭력적,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통해서 재생산된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는 집에서 소속 지역(정치의 영역)에 따라 한표를 행사할 수 있을지언정, 직장(경제의 영역)에서는 모든 정치적 권리를 제약당한다. 경제의 영역인 직장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의 목적과 종속과 강도와 양에 대하여 어떠한 통제권도 가지지 못하는 바, 이것은 노동자에게는 부르주아적 소유권이 배분되지 않는 사적 소유의 결과이다. 자본주의사회 특유의 정치/경제의 절대적인 분리, 그리고 노동의 소외는 부르주아적 소유권에 기반한 사적 소유의 결과인 것이다. 이 사회에서 노동자는 소외된 노동을 이미 계약된 단체협약을 통한 인상의 기회가 주어지는 임금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마르크스주의가 이같은 정치/경제의 절대적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전략은 크게 사회주의적 경향과 공산주의적 경향의 두가지가 혼재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 사회주의적 경향은 노동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경향이다. 여기서 노동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사적노동을 직접적 사회적 노동으로 전회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한 방법은 중앙경제계획기구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노동력을 배분하는 계획생산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이행전략의 사회주의적 경향은 중앙권력집중적, 국가주의적, 반시장적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혁명당시의 볼셰비키가 이같은 경향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두번째 경향인 공산주의적 경향을 살펴보자. 공산주의란 그 어원상 직접민주주의적인 자치 공동체, 즉 코뮌(commune)의 이념으로서, 당연히 분권적, 반국가주의적이며 시장존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 맑스주의의 '국가 소멸'테제는 바로 이러한 공산주의적 경향의 산물이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협동조합을 탈자본주의의 맹아로 파악하는 '자본론' 3권이나, 1871년 파리코뮌을 분석하고 옹호한 마르크스의 『프랑스에서의 내전』,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를 계승한 레닌의 『국가와 혁명』 등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혁명기에는 볼셰비키에 의해 제압된 소비에트민주주의자들이 이러한 경향을 대표했으며, 이후의 공장평의회운동, 트로츠키주의, 마오주의, 생태사회주의등이 그 맥을 이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현실사회주의에서 채택된 공식마르크스주의는 위의 사회주의적 경향을 일면적으로 강조하여 공산주의적 경향에 대해서는 논의를 억압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국유화를 반대하는 이같은 공산주의적 주류는 공식 마르크스주의로부터는 극좌무정부주의나 뿌디뿌루아적 샌디칼리즘이라는 딱지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마르크스주의의 국유화에 기초한 계획화의 이행전략은 체제적 비효율성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체제적 효율성을 내적으로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된 진영간의 경쟁에서 사회주의진영이 '자본주의적'으로 살아남기를 강제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하여 위로부터의 관료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일당독재화, 기본권의 말살이 진행되었으며, 결국 현실사회주의는 파산하기에 이른다⁵⁵⁾.

이와 관련해서 최근 진행된 협동조합이나 노동자소유주식회사 등에 관련된 논자들은 위의 마르크스주의 이행전략에서의 공산주의적 경향의 복권을 시도, 협의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점유권이나 노동통제권까지 고려함으로써 기업 내 권력구조의 재편을 모색한다. 이러한 대안적 소유형태의 모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넘으므로 여기서는 이들을 간략하게 평가한 이범의 논의를 옮기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이들이 각각 주장하는 바는 세부적인 면에서는 편차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략 부르주아 소유권에 기반한 공동소유를 주장한다는 면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자 개인이 소유하는 소유권은 점유권과 노동통제권을 포함하는 부르주아적 소유권이며, 생산수단의 점유자(노동자)가 곧 소유권자라는 점에서 공동소유라고 파악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소유형태를 '부르주아적 소유권에 기반한 사적소유'라고 보고 탈자본주의적 소유형태를 '부르주아적 소유권에 기반한 공적소유'라고 볼 경우, 우리는 이행과정에서 보존되어야 할 것(부르주아적 소유권)과 변화되어야 할 것(사적소유→공동소유)을 명료하게 분별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가지는 이점은 현실사회주의에서의 시도되었던 국유화에 기반한 계획생산모델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노동조직-기술형태의 발전을 탈자본주의적으로 방향으로 정향시킴으로써 '노동의 소외'를 완화 또는 근절하고 노동과 자아실현을 근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물론, 이같은 소유형태가 부딪치게 될 문제점도 또한 적지 않다. 시장-이윤논리의 온존으로 인한 시장조절, 거시적 계획을 통한 경제구조재편의 필요, 기업이기주의에 대한 제어, 그리고 유통이나 분배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산자원의 재편을 요구하는 환경위기 등 많은 문제들이 이러한 소유형태의 해결과제로 닦치게 된다.

이제 이러한 협동조합 또는 노동자 소유주식회사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행 전략에 대해 몇가지를 덧붙임으로써 탈자본주의적 소유형태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한다. 김기환에 의하면, 최근 논의되는 체제대안의 논의는 그 이론적 정합성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현실 자본주의 체제의

55. 흔히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자가 1인일 때를 사적소유, 2인 이상 일 때를 공동소유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규정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주식회사(종업원지주제가 완전히 못함)를 사적소유가 아니라고 판정지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범, 앞의 글. 이와대한 비판으로는 송태경, 소유문제와 관련된 논의들, 서울대 교지 『관악』 1994년 여름호 참조. 그리고, 송태경에 대한 간략한 비평은 김기환, 『이행의 아포리』, p211 참조.

모순관계로부터 비롯되는 동력과 결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흐름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자본의 압도적 재생산 능력에 앞에서 파산하고 말았다. 그는 소유관계의 문제를 가치관계⁵⁶⁾와의 관련속에서 파악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가치관계와 결합하지 못하는 소유관계는 법률적이든, 실질적이든 일면적인 수밖에 없으며 결정적으로 이행의 논리와 대안의 논리가 통일적으로 제시되지 못한다는 공상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일정한 역사적 형태로서의 소유관계, 그리고 그것에 기초지위되면서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근본원리인 가치관계, 가치관계에 의해 규정되면서도 특정 생산양식을 역동적으로 재생산시키는 현실적인 가격체계(통합과 교환의 체계)라는 세가지 범주에 의해 체제동학이 구체화되며, 여기에는 이미 물적이고 해계모니적인 소유와 통제권이 포섭된다고 그의 논의를 정리한다. 그리하여, 체제대안으로서의 자주관리사회주의를 혁명적 이행에 의한 소유관계의 재편- 사회주의 가치관계 - 사회주의 가격이론이라는 기본 범주에 입각해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는 체제대안적인 가치법칙으로서 자본주의에서의 교환가치를 넘어서서 사용가치⁵⁷⁾의 개념의 확장(단순한 물적 유용성의 의미를 넘어선 욕구충족으로서의 효용개념)을 생산자연합사회로의 이행의 중요한 원리로 삼는다. 이상까지의 자본주의와 탈자본주의적 소유형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COPYLEFT운동의 체제대안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 COPYLEFT를 다시 읽자!

GNU의 COPYLEFT는 지적소유권은 저자가 가지고, 그것을 자유롭게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는 Copying 라이선스를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현실에서, 소스코드까지 공개했을 때, 그것을 조금 고쳐서 만든 프로그램에 자신의 지적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GNU프로그램을 고쳐서 만든 것도 COPYLEFT되기 위한 규정을 둔다. COPYLEFT는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얻는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고치고, 그것을 다시 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는 조건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COPYLEFT운동을 탈자본주의적 소유형태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GNU강령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GNU 강령에서 찾을 수 있는 COPYLEFT운동의 체제대안적인 함의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적 재산권에 기초한 정보상품화에 대한 반대

마르크스는 『자본론』 1권에서 고립된 노동의 생산물만이 상품으로 대답한다고 말했다. 즉, 인간의 노동이 고립된 상태에서 행해져야만 그들의 노동 생산물은 상품이 된다고 규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보상품은 결코 고립된 노동의 산물일 수 없다. 정보상품은 사회적인 생산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한데, 이것은 정보상품들의 소비행위자체가 생산에 곧바로 피드백되는 네트워크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6) 또한, 발리바르는 지적재산권에 관련하여 모든 기술과 모든 문화에 수반되는 지적 활동 또는 인간활동들의 지적 측면은 현실적으로 항상 사적 소유와 모순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배타적 지식', 또는 지식에 대한 공적 또는 사적 독점이라는 개념은 형용모순이라고 규정한다. 17) GNU강령은 정보상품화를 뒤받침하는 지적소유권은 본래 방명한 사람을 돕기 보다는 사회를 돕기 위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전에는 유용했던 지적재산권 제도는 현재의 기술발전하에서 전체사회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들은 정보상품화가 프로그래밍에서의 창조적 지적활동을 통한 프로그래머들 사이의 우정을 느끼게 하기 보다는 경쟁적, 투쟁적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정보상품화를 불쾌하게 생각한다.

56. "이처럼 한 사회의 생산양식을 기초지위주는 가치이론은 자원과 노동배분의 원리이자 생산활동이 조직되고 통합되는 원리, 생산의 동인과 그 유인기제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향에 대한 문제도 자체 내에 포함하는 것이다. ... 따라서 소유관계의 역사적 전제에 관한 문제는 가치관계의 궁극적 기초이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논리적, 역사적 전제이다. ... 한 생산양식의 지배적 소유관계는 그 사회의 안정적 재생산이라는 조건하에서만, 따라서 일정한 발전단계에 의해 지배적 생산양식의 실질적 포섭이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만 분석 가능한 개념이며 주어진 역사적 가치관계에 의해 그 실체가 규정된다는 것이다." 김기환, 위의 책, p210-211

57. "상품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의 수단이 될 뿐이며, 각각의 생산 주체에게 있어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체계적으로 대립한다. 자본가에게 노동력은 가치증식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이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 생계유지의 수단일 뿐이며 노동은... 고통의 대상이 될 뿐이다. 또한 석유나 에너지, 혹은 기계의 경우 역시 ... 자본가에게는 보다 효과적인 착취의 수단이자 노동력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대체재이며, 노동자에게는 ... 사회적 압력이 되고, ... 경쟁자가 된다. ... 그리하여 보다 이윤이 높은 생품생산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지 상품으로 가공된다. 또한, 경쟁에 의해 감소되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운명과도 같은 불균등, 불비례적 축적은 자본주의적 이윤증식과 결합해 생태계의 균형을 여지없이 파괴한다." 김기환, 위의 책, p.164-165. 사용가치와 '사회적 필요'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그네스 헬러, 『마르크스에게서 필요의 이론』, 인간사랑, 1989.

이는 지적재산권으로 대표되는 프로그램에 관한 자본주의적 소유형태에 대한 명백한 반대이며, 상품이 아닌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본주의 특유의 폭력적 방식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에 의한 정보생산물의 생산과 소비 그들에 의하면,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는 오직 금전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한다. 많은 프로그래머들에게 프로그래밍은 그 자체가 저항할 수 없는 매력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들면서, 프로그래밍의 창조적 활동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와 같이 프로그램의 복사를 제한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기본 방침이 아니며, 다만 이러한 방식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계급대립이 소멸하고 어떠한 계급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미래사회에서는 사용은 이제 더 이상 생산시간의 최소량(교환가치, 그리고 이것의 일반적 등가물인 화폐, 즉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대상물에 바치는 생산시간이 그것들이 가지는 사회적 유용성(사회적 필요, 사용가치의 확장된 개념)에 의해서 규정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누구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금전적인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에서의 교환가치에 의한 생산방식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 정보생산물에 관련된 생산수단의 공적소유를 위한 대안마련 GNU에서 제공하는 운영체제인 LINUX나 개발 중인 HURD를 생산수단으로 파악할 수 있는나의 문제를 논의로 하고서라도, 이러한 운영체제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점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귀 기울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일단 GNU가 작성되니까, 마치 공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단지 모든 이에게 유닉스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덜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시스템프로그래밍에 드는 노력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신, 절약된 노력은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것이다.

...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시스템 코드를 배우고 향상시키도록 장려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버드 컴퓨터 연구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든지 그 소스가 공개되지 않으면, 시스템에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정책을 고수했다... 결국에는 누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고려하는 제비용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는 행위는 프로그래머에게 있어서는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생산적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즉, 이것은 프로그래밍을 직접 담당하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래밍도구(생산수단?)는 공동의 소유로 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생산자들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

- 정보생산자와 사용자가 결합되는 대안적 공동체

프로그래머가 생계를 꾸리기 위한 방법은 반드시 현재와 같이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파는 방법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 대안적 방법에 대한 예들을 제시한다. 그 중 특기할 만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용자들로 구성되는 사용자그룹의 자발적인 회비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한 다음, 정보생산자들의 그룹과 결합되는 방식이다. 실제로 FSF(Free Software Foundation : GNU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단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동체는 체제대안적 소유형태에서의 하나의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GNU의 COPyleft운동은 체제대안적 소유형태를 논하는데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기본전환을 위해 이들이 그리는 공동체모델과 마르크스의 그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논의를 접기로 하자.

"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더 이상 단지 생계를 위해 고되게 일할 필요가 없는 풍요로운 세계로 가는 한 단계인 것이다. 사람들은 프로그래밍같은 자신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일에 자신을 몰입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법률이 규정하는 주당 열시간 정도의 노동을 마친 후엔, 가족들과 담소를 한다든지, 로봇을 수리한다든지, 천체를 관측하는 일 따위를 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프로그래밍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의 배타적인 활동영역을 가지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어떤 분야에서나 스스로를 도야할 수 있으며, 사회가 전반적 생산을 조절하게 되어, 이를 통해 오늘은 이 일을 내일은 저 일을 하며, 사냥꾼이나, 어부, 목동이나 비평가가 되지 않고서도, 마음내키는 대로, 아침에는 사냥을 하고, 오후에는 물고기를 잡고, 저녁에는 소를 치고, 저녁식사 후에는 토론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 마지막

지금까지 우리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서 GNU의 COPyleft운동을 평가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소유형태에서 탈자본주의적 소유형태에 이르는 논의로 우회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소유형태에 대한 논의와 COPyleft에 대한 논의가 조화롭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는 물론, 필자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이에 관련된 논의가 거의 전무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본문에서는 COPyleft운동의 체제대안적 함의를 긍정하는 측면에서 주로 서술했지만, 그것이 가지는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태면,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폭력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열풍 앞에서 과연 COPyleft운동이 가지는 위상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와 GNU의 COPyleft운동은 '정보의 공유'라는 대단히 정치적이고 민감한 관점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행히도 이것은 인터넷상의 특수한 현상으로만 파악이 될 뿐,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측면으로 전화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COPyleft운동을 아나키스트적 운동이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마르크스주의 이행전략 내부에서의 공산주의적 경향에 대한 일면적 무시를 다시 반복하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글을 쓰면서 계속 든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 보다 필요한 것은 풍부한 실천적 관점이 아닐까하는 것이었다. 마르크스의 말대로 공산주의는 현재의 상태를 지양하는 운동이다. 언제부터인지 대단히 환영을 받던 소유형태와 이행전략에 대한 논의가 많이 사그라든 느낌이다. 보다 역량이 있는 필자들의 논의를 기대하면서 부끄러운 글을 마친다.

6.4. 정보가 공유되는 사회를 위하여 (고영경)

■ 들어가며

이 시대의 핵심적 화두는 아마 '정보'일 것이다. 미래의 권력은 지식과 정보의 소유에 있다고 한 엘빈 토플러의 말은 이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는 빠르게 '정보화' 되고 있다. '손 끝에서 모든 정보를' 얻고 지배할 수 있다는 빌 게이츠의 말은 점점 실현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 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불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현재 정보는 상품으로 팔리고 있으며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것이 지적소유권이다. 정보는 소유되고 독점되고 통제되는 그 무엇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식과 정보가 인류 공동의 자산이며 따라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정보가 공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이다.

■ 지적소유권

수확공식도 돈을 내고 써야 된다? 믿기지 않지만 그렇다고 한다. 실제로, 특정 소프트웨어에 쓰이는 알고리즘은 그 자체가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받는 품목이며, 판권을 소유한 회사 외에는 그것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다.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싶다면 상당한 돈을 내고 소유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식도 하나의 재산으로서 특정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믿는 우리의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다. 보다 친숙하게는 대부분의 출판물, 비디오, 음반, 소프트웨어에 박혀있는 살벌한 문구들을 떠올릴 수 있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어느새 지적소유권, 즉 지식과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이 거대화되면서 이 분야의 지적 소유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

원래 지적소유권은 발명이나 저작이 개인의 영역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공익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개발자에게 주는 제한적 특권으로 시작되었다. 즉 지식에 대한 개인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식의 공개를 통한 사회공공의 이익을 의도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적소유권은 본래의 목적과는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의 개발과 사회적 이용을 오히려 가로 막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엄청난 낭비와 사회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 생산기술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다른 사람의 성과를 토대로 자신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면 기술 발달은 훨씬 빨라질 것이며 생산비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 지금까지 인류가 지식을 축적하고 발달시켜 온 것은 이러한 정보의 공유에 의존한 것이었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이는 바로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아이작 뉴턴의 말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기술 발달의 속도가 대단히 빨라진 지금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특허권은 등록된 순간부터 20년, 저작권은 작자 사후 50년까지)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정보생산의 대부분이 기업단위로 이루어지고,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귀속되고 있다. 더욱이 지적소유권의 대부분을 거대 초국적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 예로, IBM은 라이선스와 매수 합병 등을 통해 2년만에 특허보유 6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지적소유권은 정보 생산자의 노력과 창의성에 대한 보호라는 그 목적보다는 자본의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뒤러린 임노동 관계속에서 실제 정보 생산자인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고 있는가는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지적소유권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이상과 같이 지적소유권은 자본주의와 맞물려 비효율과 불평등을 낳은 제도로 왜곡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소유권의 폐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흐름이 있다. copyleft 라 불리는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FSF라는 단체의 GNU 프로젝트이다.

■ 리처드 스톨먼과 GNU 이야기

GNU란 FSF(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추진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이다. 이걸 너무 딱딱하고 불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다. 그러면 GNU를 처음 시작한 리처드 스톨먼의 이야기부터 풀어 보도록 하겠다.

리처드 스톨먼은 최후의 해커이자 영원한 해커로 기억되는 사람이다.3) EMACS 에디터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을 만든 뛰어난 프로그래머이기도 하다. 그는 정보의 공유,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이라는 해커의 윤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다. EMACS 에디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해커의 윤리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누구나 그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공개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사용자들에게 부여한 것이다. "EMACS의 개선을 돕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모든 기능을 확장시켜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지요. 나는 이러한 관계를 'EMACS 코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의무였지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모토였습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이 당시 해커들의 공동체였다. 그러나 점차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과 상용화의 경향, 등록된 사용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체계 등 외부 세계가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해커들도 하나둘 자본에 고용되는 형태로 빠져 나가고 그들이 이룩한 공유의 문화도 사라져갔다. 해커들과 해커의 윤리를 사랑했던 스톨먼은 이를 무척 가슴아파 했고 고독을 느꼈다.

스톨먼은 이 모든 것들과 싸우기로 결정했다. 공유와 나눔에 기반한 깊은 이해와 신뢰가 있었던 해커들의 공동체를 현실에서 복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해커의 윤리가 MIT에서 변질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순수한 형태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어느새 통념이 되버린 지적소유권과 상용화의 경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현실의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저항을 모색해야 했다. 그는 유닉스(대형 컴퓨터에서 주로 쓰이는 운영체제) 상에서 실행되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들을 공개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제작성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며, 이를 매개로 'EMACS 코문'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GNU 프로젝트'이다. 스톨먼이 그의 입장과 GNU의 취지를 담아 쓴 "GNU 선언문"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 명문으로 꼽힌다.

(GNU에 대해 의문이 드는 분들, 그리고 GNU가 너무 낭만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를 꼭 한 번 읽어보기 바란다.) 그 중 일부를 잠시 보자.

왜 GNU를 작성해야만 했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황금률(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성서)이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사용자를 각각 구분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사용자 서로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간의 결속이 깨어지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올바른 양심으로 비공개협정이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협약에 서명할 수 없다. 여러해 동안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그러한 경향과 다른 박정한 일들에 대해 저항해 보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내 의지에 역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연구소에서 나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도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본체를 만들 결심을 했다.

-리처드 스톨먼, "GNU 선언문" 중에서

스톨먼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이란 단체를 만들고 GNU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갔다. 그들이 목표로 한 것은 운영체제로부터 각종 개발도구, 응용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공개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완결된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탕에 깔려 있는 해커의 윤리를 척박한 자본주의 사회에 퍼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공유와 나눔, 자유로운 정보 접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더욱 풍요롭고 인간적인 사회를 꿈꾸었던 선구자들이었다.

FSF에서는 GNU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1년에 2번 "GNU Bulletin"이라는 온라인 잡지를 내고 있다. 현재는 새로운 운영체제인 HURD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또 지적소유권에 대한 대안으로 copyleft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의 확산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FSF와 GNU 프로젝트는 사용자들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면서 그들의 활동과 취지에 대해 알리고 이에 동의하는 사용자들의 기부를 요청한다. 그리고 FSF를 후원하는 기업의 Linux(PC용 공개 유닉스) 배포본을 살 것을 사용자들에게 권유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보생산자의 노력과 창의성에 대한 보상이라는 문제, 더욱 절실하게는 프로그래머들의 생계유지라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모색하는 이 생산 모델은 시사하는 바 크다.

■ COPYLEFT : the Alternative of COPYRIGHT

지적소유권이 본래의 목적과는 반대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효용을 저해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FSF에서 만들어 낸 새로운 소유권 개념이 copyleft이다. copyleft는 지적소유권(copyright)은 저자가 가지고, 그것을 자유롭게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는 Copying 라이선스를 공공의 소유로 공개하는 것이다(GPL:GNU Public License)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한 공공의 소유로 하지 않고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이유가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인정하는 현실에서, 저자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유와 수정에 대한 사용자들의 자유를 보장하며, 그것이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공개된 소스를 조금 수정하여 그것에 자신의 지적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GNU 프로그램을 고쳐서 만든 것도 사회적으로 공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한 것이다.

copyleft 개념을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여러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프로젝트도 진행중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OBI(Online Book Initiative), Gutenberg, Rudenberg 프로젝트 등이 있다. 4) 이제 살벌한 문구를 대동한 copyright 표시 대신 "-copylefted by **"라는 고마운 마크를 단 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두 영국 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지적소유권에 대한 그들의 리포트를 읽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정보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copyleft는 이제 정보 공유의 상징이 되었다.

copyleft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GNU 프로그램은 소스까지 완전히 공개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읽고, 쓰고, 나눌 수 있다. 이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독점하고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메카니즘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이다. 정보의 공유와 그로 인한 상호이익을 생각해 보라. 모든 정보를 돈을 내고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할 것인가?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제한될 것이다. 정보가 현실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계급 재생산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롭게 수정하고 배포하는 것을 허락하고 권장하는 copyleft는 정보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더 이상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별될 필요없이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에 의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개선되며 모두가 그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이다. 또한 사용자의 기금을 받아 운영되며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모색하는 FSF의 운영방식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copyleft는 지극히 혁명적인 함의를 지닌다. 정보가 생산력의 핵심적 계기가 되어가는 지금 정보의 공유에 대한 주장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적 소유에 기반한 지금의 체계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유익한 체계임이 널리 인식된다면 이로부터 탈자본주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 마치며

"정보에 지배당한 사회"라는 책 제목을 본 적이 있다. 정보를 독점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자본!)에 의해 지배당한 사회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지도 모르겠다. 미래는 암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다 인간적인 그리고 보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해 보라.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 꾸준히 활동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생각해 보라. 이제 지적소유권과 copyleft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copyleft 운동을 제안하며 글을 맺는다.

-리처드 스톨먼을 비롯한 많은 선구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FSF URL : <http://www.cs.pdx.edu/~trent/gnu/>

: <http://www.inf.tu-dresden.de/gnu/>

6.5. 대학생신문 기고글

6.5.1. PC 통신의 정치적 가능성 (오병일)

■ 새로운 '공간'의 형성과 정치

PC통신이 시작된지도 불과 56년 전인데, 벌써 통신인구가 100만을 넘어섰다고 한다. 급속한 성장이다. 이제 PC통신은, 특히 20대 젊은이들에게는 하나의 생활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신문기자들은 여론의 향방을 PC통신을 통해 읽고 있으며, 방송은 PC통신을 통해 시청자와 피드백하고 있다. 개개인이 느끼는 감도는 다를지라도 이미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PC통신과 연관해서 정치를 얘기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공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통신공간 속에서 만나서, 정보를 나누며, 싸우고 토론하며 웃고 운다. 개인의 심사를 망연히 풀어놓을 수도 있다. 그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며, 현실공간(Realspace)이다. 그래서 정치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선거시기에 통신을 활용하거나 정치적인 선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 흔히 말하는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동시에 형성되는 권력에 관계된 것이라면 말이다. 통신공간은 새로운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식도 변형시키고 있다. 기존의 권력은 위협받고,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권력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 문제를 보는 관점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 대한 논의는 단지 정보화의 진전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이나 국가경쟁력의 강화, 생활수준의 향상의 관점에서만 논의될 수는 없다. 정보화는 성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사적 정보는 보호받을 수 있는가? 사회의 문화적 자산은 모두에게 열려질 수 있으며, 개개인이 문화의 소극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교류할 수 있을 것인가? 정보의 독점에 의한 권력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PC통신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탐구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 PC통신이라는 매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권력관계를 꿈꾼다. 물론 이는 PC통신이라는 매체에만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권력관계가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전제로 한다면, PC통신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매개인 셈이다. PC통신의 가능성은 그 한계를 미리 상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고 확장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 실험은 PC통신 내에서, 또한 PC통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럼, PC통신의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몇가지 단초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 통신상의 동호회 운동

우리나라의 PC통신은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의 상용 BBS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왔다. 이 내에서 진보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여러 갈래로 발전되어왔는데, 하이텔의 바롱모나, 천리안의 현철동, 나우의 찬우물처럼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진보적인 통신동호회가 있는가 하면, 나우의 진청이네나 노조, 사회단체들의 CUG(폐쇄 사용자 그룹)와 같이 외부단체가 온라인으로 진입한 경우도 있다. 진보통신동호회의 경우, 조직적이고 일상적인 실천활동을 벌여내기는 힘들지만, 진보적인 내용과 사회적인 이슈들이 신속하게 교류되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외부단체들이 통신망으로 진출한 경우는, 예초에는 통신망을 선전의 공간, 그리고 대중들과의 접촉의 공간으로 이용하였으나, 점차 단체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거나, 통신공간 자체가 특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여론 형성의 공간

PC통신은 여론 형성의 새로운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한데, 대구가스폭발 사고에서 보여주듯이 기존 언론에서 감추어진 진실이 드러나기도 하고,

삼풍사태에서처럼 통신망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히 꾸러지기도 하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시위, 파업, 구속의 속보 등이 진보통신 동호회의 게시판 등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의 정보검열 법안 입법에 반대하는 블루리본 캠페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벌어지고, 진보통신단체들의 연대모임인 통신연대 주체로 5.18 서명운동이 펼쳐지는 등 의식적인 여론조성을 도모하기도 했다. 통신상의 Action Alert는 서명, 캠페인, 항의 E-Mail, 전화항의 촉구 등이 행해지고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쉽게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모색해나감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압력단체로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넷

하지만 상용 BBS는 폐쇄된 공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인터넷은 열린 공간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인터넷은 익숙하지 못하다. 이제 몇몇 사회단체들이 힘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E-Mail을 이용한 사회단체들간의 소통은 아직 먼 얘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터넷의 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선취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많은 실험들이 남겨져있다. 그 방향은 열린 네트워크로서 인터넷을 유지시키며, 사람들간의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서관을 비롯한 모든 학문적, 문화적인 자산들을 사회에 열어놓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모색, 소수의 목소리를 담낼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방송국의 실험, 지역 주민이 주체가된 지역 네트워크의 구성 등.

■ 맺으며...

PC통신을 통한 정치적 실험은 통신공간 내부에서도, 또 통신공간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실험의 과정은 싸움의 과정이기도 하다. 사회의 권력구조를 그대로 통신망내에서 관찰시키려는 시도에 맞서야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거대독점자본의 네트워크 장악 음모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의 검열이다. 울초에 있었던 01410 유료화 반대운동은 사용자운동으로서의 의미 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정보통신 산업은 단지 기업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온 국민의 공공의 자산으로서 평등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얼굴을 한 정보화사회'의 모습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추진 과정이 공개되고, 시민, 사회단체에 의해 공공성이 강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관련 통신인 구속이나 해커 구속 사건, 그리고 계속되는 통신망 상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정부의 통신공간에 대한 검열과 통제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쌍방향성에 근거한 통신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소통을 제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다면, 통신공간은 죽은 자료들의 저장고이며,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는 기계로 전락할 것이다.

PC통신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를 먼저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자 하며,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아닐까 한다.

6.6. 번역문(노동정보화사업단 김성원)58

6.6.1. 미국 노총(AFL-CIO) 집행위원회의 정보고속도로에 대한 입장 : 1995. 5.10, 워싱턴 DC

정보고속도로의 발전 - 통신 네트워크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와 전력 소비자들의 망-은 미국인들의 삶과 노동, 학습과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통신 기술의 진행중인 혁명은 미국의 노동자들과 노조들, 그들의 공동체와 전체 사회에 좋든지 나쁘든지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 허부구조의 가장 좋은 몫은 사적인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고, 그것의 잠재적인 이익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조정하고 자 하는 기업에 의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조치는 이들 사적 이익보다 우세한 부분이 공적이익임을 확신시켜야만 한다. 이미 정보와 기술의 접근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어떤 사립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랩탑 컴퓨터를 소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가난한 지역의 공립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열 여유조차 없다. 정보를 집중하고 있는 통신 기업들은 정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주요한 정보에 대해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어떠한 확실한 연방 정책도 없다. 그러한 정책도 없이 정보고속도로는 확실히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를 정보를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면서 그 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 통신산업에서의 혁명은 25만명의 고소득 하이테크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였다. Labor Statistics의 미국 사무국은 타자수 만큼이나 컴퓨터와 주변기 오퍼레이터와 데이터 입력수와 은행원 등을 위한 수많은 일자리가 다음 10년 동안 12만2천개의 다른 일자리에 의해 교체되며 감소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정보처리 직업은 국제무역의 압력에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다. 정보고속도로의 확장은 국가간 경계에 의해 우회하지 않고 앞으로 우회하지 않을 것이다. 정보산업의 성장은 이미 미국의 일자리를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해왔다.

통신기술의 진보는 또한 정보고속도로 상에 이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개인적 책임으로서 사용료를 부과해왔다. 또한 새로운 기술은 신뢰성이 없고 보정되지 않는 정보의 사용을 증진시켜왔다.

분명하게 정부의 정보고속도로에 대한 정책은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적당한 임금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하에서 정보를 확산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쪽으로 정해져야 한다. 연방법은 독립제조업 노조들을 통해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관한 순수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의 사적 권리에 대한 적당한 보호를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의 저작권 보호법은 미국 국내외에서 생산된 정보에 대한 부당한 사용을 강력하게 보호해야만 한다.

AFL-CIO는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에 모든 미국인들이 각종 프로그래밍을 확신시키고 통신망과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개방하기 위한 비상업적인 관심과 공적인 사용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정보 기반시설에 그들의 집과 학교와 도서관 또는 마을 회관에서 접근가능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모든 수준에서 정부가 새로운 통신 기술을 통해 정부의 서비스와 문서들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촉구하였다.

AFL-CIO는 모든 기관과 주정부,중앙의 지역 지부가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의 공동체와 직장의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다 큰 목소리를 위한 노동자들의 역사적 전망을 증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통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촉구하였다.

6.6.2. 이익이 많아질수록 적어지는 일자리..... 거대기업을 위한 정보고속도로 : 캐나다 노총의 IHAC(정보고속도로 자문위원회) 위원 PARROT

TORONTO....."위원회는 정보고속도로가 거대기업에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이익이 많아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 IHAC(Information Highway Advisory Council, 정보고속도로 자문위원회)의 위원이고 CLC(캐나다 노총) 집행위원회 부의장인 Jean-Claude Parrot는 IHAC의 공식적인 보고서와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토론토의 '캐나다 영화, TV, 라디오 아티스트 연맹'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Parrot는 "15개월 동안 IHAC의 위원으로 참가한 후에 나는 소수의견

58. 아래의 두 글들은 노동정보화사업단의 김성원씨께서 SING 메일링리스트에 올린 글들입니다. 김성원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노동정보화사업단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보고속도로 추진과 노동 문제에 관한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이견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IHAC의 권고는 실업자들과 Bell, Northern, Telecom과 그밖의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노동자들처럼 기술발달로 인해 실직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한다. 또한 기술혁명이 파괴하고 있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아무런 확신도 주지 못한다. 위원회의 권고는 실직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직 캐나다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HAC의 성패는 실업률에 달려있다."

"처음부터 위원회의 작업은 자유시장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색채를 띠고 있었다. 반대로 정보고속도로는 공적인 후퇴와 조정의 경향을 지낸 채 탄생했다. 두말할 것없이 IHAC는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CLC(캐나다 노총)은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공유하고 9-포인트 프로그램 채택해야함을 알았다. 나의 IHAC에 대한 견해는 노동현장의 이슈와 고용과 관계된 복잡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다"

반대견해의 중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시장은 문제의 해결을 해고와 감원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은 고용을 창출해야 할 책임과 그 책임을 기업과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보고는 기술변화와 세계화에 직면한 노동자들을 적절히 보호할 것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을뿐이다. 마치 경쟁이 자주 보다 적은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과 같이 적당한 보호는 종종 노동자들의 권리가 축소됨을 의미하고 노동자들의 평균생활 수준의 하락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그들은 노예와 같은 노동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사회현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노동기준과 같은 최소한의 법률적 조치를 정부에 권고하지 못했다.

네 번째로 위원회는 국가고용과 기초직업훈련 등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왔다. 위원회는 이 분야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함을 권고해야만 한다.

다섯 번째로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고를 권고답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생활수준, 권리, 일 등에 끼칠 영향력 등에 관한 세부항목을 담고 있는 법률적인 변화를 연방정부가 조사하라는 권고를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산업경제부문을 위해 의무고용의 영향력에 관한 선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지 못했다.

이 권고들은 단지 협소한 상업적인 관심 보다도 광범한 공적관심을 좀더 촉구했어야 했다.

위원회의 마지막 보고에 대한 나의 반대견해는 보고서의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본인의 반대견해는 학습과 훈련, 만족, 문화 등의 영역에서 몇가지 보고서에 대해 수동적인 면이 있다.

나는 위원회의 정신노동 분야의 대표에 의해 제기된 나의 보고서가 우리의 압력과 충고에 접한 정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기를 바란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을 취하십시오.

Jean-Claude Parrot, Executive Vice President Canadian Labour Congress (613) 526-7403

Alexander Crawley, President Assn. of Can. Cinema Television & Radio Artists (416) 489-1311

Forwarded by: Dick Sclove

The Loka Institute, P.O. Box 355, Amherst, MA 01004 USA Tel. (413) 253-2828; Fax (413) 253-4942;

loka@amherst.edu

World Wide Web: http://www.amherst.edu/~loka/

"노동자에게는 실업을, 자본에게는 더 많은 이윤을..." 정보고속도로(초고속통신망) 건설에 대한 미국 노총, 영국 노총, 그리고 영국 노동당의 입장은 모두 이와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 같군요.

6.7. 통신연대 월례 포럼 정리

6.7.1. 5월 월례 포럼 발제문 : Public Access (오병일)

지난 월례포럼의 주제였던 'Universal Service'라는 개념이 공공적으로 승인된 개념이 아니었듯이 'Public Access'라는 개념 역시 그러하며, 따라서 명확하게 그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Universal Service, Public Access와 함께, Universal Access, Universal Public Access, Open Access 등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의 의미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그 단어의 내포가 (정보 통신 인프라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에 따라 달라져온 것과 관계되는 것 같다. 발제자의 느낌에는 'Universal Service'가 주로 전화 인프라에 관련되어 발전되어온 개념이며, 다양한 정보 통신 서비스의 발전과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존재,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의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변화에 따라, 'Universal Service'의 개념을 재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Public Access'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Universal Service가 재규정되어야 하는 맥락과 Public Access가 내포해야 할 것들을 미국 NTIA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Universal Service (by OECD) , 1991

- 1) Universal Geographical Access
- 2) Universal Affordable Access
- 3) Universal Service Quality
- 4) Universal Tariff

전통적인 전화사업에서 제기된 Universal Service는 위의 4항목중 1)과 2) 중심이었다. 이는 서비스의 제공여부가 관건이 되는 그 당시의 기술적인 상황, 예를 들어 매출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교환기간 상호접속을 위한 기술적인 표준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 등에 기인한바가 크다. 하지만, 1991년에 제출된 OECD 보고서에서 '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전화)서비스의 제공여부를 넘어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기본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가 구별되고, 어디까지 기본 서비스로 할 것인가가, 다시 말하면 Universal Service를 어떻게 재규정할 것인가가 문제로 되었다.

■ Advanced Universal Service Access

- 1) NTIA [The NTIA Infrastructure Report : Telecommunication in the Age of Information]
- 2) 전화서비스의 고도화 문제(컴퓨터화)
- 3) 터치톤식 다이얼, 긴급 통화용(119), 청각 장애자용 기기, 장거리 통신 사업자에 대한 '균등접속'

■ REA(Rur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의 '유니버설 서비스의 요소에 대한 가이드 라인'

- 1) 모든 서비스 제공업자가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한 접속을 하게 할 것
- 2) 모든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해 모든 서비스가 무차별 전송될 것
- 3) 매월 기본 요금의 범위 내에서 모든 가입자가 건강, 안전, 긴급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을 것
- 4) 모든 시내 가입자가 모든 시내 교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을 것
- 5) 모든 가입자가 모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을 것

■ 전미정보기반구조: 행동지침(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genda for Action)

- 1) 1993년 9월 15일, IITF(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 2) NII추진을 위한 9대 목표와 구체적인 시책을 담고있다.
- 3) 9대 목표(원칙)
 - o 민간의 투자를 촉진한다. 또 그 촉진책으로서 경쟁의 활성화와 세제를 적극 활용한다.
 - o '유니버설 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하고 다시 정의한다.
 - o 기술 혁신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촉진한다.
 - o 단절없는(seamless) 양방향 이용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운용한다.
 - o 정보의 안전성과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 o 주파수 할당정책을 개선한다.
 - o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 o 대내적으로는 주 정부와 규제 정책 등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전기통신 관련 제품, 서비스 및 컴퓨터에 관한 해외 시장의 개방을 촉진한다.
 - o 정부 보유의 정보 공개를 촉진하는 한편 정보 조달 절차를 개선한다.
- 4) NII의 특징
 - o 누가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 민간주도
 - o 경쟁의 중요성 강조
 - o 정보 인프라의 수요, 이용면에도 주목 --> 보급의 임계치에 빨리 도달하기 위한 노력
 - o 유니버설 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하고 재정의 시도 5) 유니버설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없다. 또한 민간 주도의 경쟁 활성화를 유니버설 서비스와 연관시켜 보고 있는데, 그 것은 경쟁 활성화를 통해서 가격인하와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 6) '단절없는 통신' (seamless communication) : 이용자는 사업자가 누가 되든지 그것을 의식함이 없이 사업자 상호간의 제휴에 의해서 상호접속을 보장받아야 한다.

■ CPSR의 관점

- 1) CPSR의 관점

NII 프로그램의 성공은 그것이 시민의 권리를 증대시키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민주적 기반을 강화했는가의 여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 2) NII가 공공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지만, 명확하지 못하다고 우려
 - o The NII may fail to provide universal access.
 - o A small number of companies may dominate the network and exert undue influence on its design and operation.
 - o There is a danger that carriers will control content on the NII.
 - o NII services may emphasize commerce at the expense of communication.
 - o Public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may be restricted.
 - o The NII may fail to provide a vital public space.
 - o The NII may be used to justify the elimination of other essential public services.
 - o The NII may fail to protect individual privacy.
 - o Global communication using the NII may be restricted.
 - o The hardware structure may be chosen without giving adequate consideration to the software implications.
- 3) IITF에 대한 제안
 - o Consider the social impact of NII development.
 - o Guarantee equitable and universal access to network services.
 - o Promote widespread economic benefits.
 - o Promote diversity in content markets.
 - o Provide access to government services over the NII.

- o Protect the public spaces necessary to foster community development.
 - o Encourage democratic participation in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the NII.
 - o Think globally rather than nationally.
 - o Guarantee functional integrity throughout the network.
- 4) NII Service Designer에 대한 제안
- o Emphasize ease of use.
 - o Provide full service to homes, workplaces, and community centers.
 - o Enable all users to act as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 o Address privacy and security issues from the beginning.
 - o Develop open and interoperable standards.
 - o Encourage experimentation and evolution.
 - o Require high reliability.

6.7.2. 5월 월례 포럼 정리글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참세상 아이디입니다.

01410 대책회의 : 이동영(014xy)님 // 얼터너티브 : 이혁수(알트넷)님 // 정보연대SING : 오병일(SING)님, 이진호(나우:narcasse)님 // 찬우물 : 지승훈(나우:apraxas)님, 김령은(나우:geist72)님 // 참세상 : 김형준(smallake)님 // 현대철학동호회 : 김바로(zspt)님, 김영선(천리안:ANAKI)님, 박소연(천리안:philonia)님

■ 5월 주제토론

5월 월례포럼은 지난 4월 월례포럼에서 논의되었던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한 '퍼블릭 어세스'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정보연대 SING에서 발제를, 얼터너티브에서 사회를, 그리고 현철동에서 서기를 맡아주셨습니다. go jinbo 3하시면 195번 게시물에 발제문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제자의 느낌에는 '보편적 서비스 Universal Service'가 주로 전화 인 프라에 관련되어 발전되어 온 개념이며, 다양한 정보 통신 서비스의 발전과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존재, 그리고 정보 통신 산업의 독점에서 경쟁체 제로의 변화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Universal Service'의 개념을 재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퍼블릭 어세스 Public Access'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퍼블릭 어세스'에 대한 회원들의 입장 표명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기로 하는 정도에서 일단은 유보되었습니다.

■ 6월 월례포럼 준비

6월 월례포럼의 주제는 역시 5월 월례포럼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는 데, <한국의 초고속 정보고속도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발제는 현철동의 김바로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 6월 월례포럼 날짜 : 1996년 6월 22일(토) 오후4시 장소 : 용산 <그림이 있는 풍경> (전화:712-42545)

■ 맥브라이드 한국회의

현재 1번과 3번 게시판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는 8월 말 있는 맥브라이드 한국회의의 NGO 파트에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통신연대 회원 여러분께서 이 논의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참세상 김형준님께서 3번 게시판에 Hannet를 제기하신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PC통신 공간에서 계속되는 폭력적인 통제를 상기고 고발합시다.

6월 월례포럼의 자리에서는 'PC통신검열백서'를 통신연대 공식사업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PC통신검열백서] 만들기' 게시판이 2-1번 게시판(go jinbo 2 1)에 만들어졌고, 실무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오프라인 모임이 6월 26일(수요일) 7시 연대앞 사회과학서점 오늘의책 옆에 있는 <가운누리>(전화:337-0791)에서 있습니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들, 그리고 그 밖에도 이 활동의 의의에 동의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PC통신 공간에서 계속되는 폭력적인 통제를 상기고 고발합시다.

6월 월례포럼의 자리에서는 'PC통신검열백서'를 통신연대 공식사업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PC통신검열백서] 만들기' 게시판이 2-1번 게시판(go jinbo 2 1)에 만들어졌고, 실무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오프라인 모임이 6월 26일(수요일) 7시 연대앞 사회과학서점 오늘의책 옆에 있는 <가운누리>(전화:337-0791)에서 있습니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들, 그리고 그 밖에도 이 활동의 의의에 동의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PC통신 공간에서 계속되는 폭력적인 통제를 상기고 고발합시다.

6월 월례포럼의 자리에서는 'PC통신검열백서'를 통신연대 공식사업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PC통신검열백서] 만들기' 게시판이 2-1번 게시판(go jinbo 2 1)에 만들어졌고, 실무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오프라인 모임이 6월 26일(수요일) 7시 연대앞 사회과학서점 오늘의책 옆에 있는 <가운누리>(전화:337-0791)에서 있습니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들, 그리고 그 밖에도 이 활동의 의의에 동의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PC통신 공간에서 계속되는 폭력적인 통제를 상기고 고발합시다.

6월 월례포럼의 자리에서는 'PC통신검열백서'를 통신연대 공식사업으로 결의하였습니다.

6.7.3. 6월 월례 포럼 정리글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참세상 아이디입니다.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 이도뜸(k2barun)님, 최세진(NeoScrum)님 // 정보연대SING : 오병일(SING)님, 이혁(antinet)님, 안유석(simulasi)님, 임완철(mskonan)님 // 참세상 : 김형준(smallake)님 // 한국과학기술청년회 : 김종남(onestwob)님, 김영식(tsKOMSAT)님, 박준원님, 정지범님, 손정우님, 홍희선님, 조윤경님 // 현대철학동호회 : 김영선(천리안:ANAKI)님, 박소연(천리안:philonia)님

■ 6월 주제토론

6월 월례포럼은 지난 4월과 5월 월례포럼을 거쳐 제기되었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초고속 정보고속도로>를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청년회에서 발제를 맡아 주셨고,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의 최세진님과 이도뜸님이 각각 사회와 서기를 맡으셨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자세한 논의 내용은 곧 올라오겠습니다만, (go jinbo 3) '정보화' 그리고 '초고속 정보고속도로'에 대해 물가치한 개념을 차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즉, 늦은감도 없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기존의 일방적인 산업적 측면의 접근에 대해 회의하고, 그런 태도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판단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PC통신 공간에서 계속되는 폭력적인 통제를 상기고 고발합시다.

6월 월례포럼의 자리에서는 'PC통신검열백서'를 통신연대 공식사업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PC통신검열백서] 만들기' 게시판이 2-1번 게시판(go jinbo 2 1)에 만들어졌고, 실무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오프라인 모임이 6월 26일(수요일) 7시 연대앞 사회과학서점 오늘의책 옆에 있는 <가운누리>(전화:337-0791)에서 있습니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들, 그리고 그 밖에도 이 활동의 의의에 동의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PC통신 공간에서 계속되는 폭력적인 통제를 상기고 고발합시다.

6월 월례포럼의 자리에서는 'PC통신검열백서'를 통신연대 공식사업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PC통신검열백서] 만들기' 게시판이 2-1번 게시판(go jinbo 2 1)에 만들어졌고, 실무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오프라인 모임이 6월 26일(수요일) 7시 연대앞 사회과학서점 오늘의책 옆에 있는 <가운누리>(전화:337-0791)에서 있습니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들, 그리고 그 밖에도 이 활동의 의의에 동의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PC통신 공간에서 계속되는 폭력적인 통제를 상기고 고발합시다.

6월 월례포럼의 자리에서는 'PC통신검열백서'를 통신연대 공식사업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PC통신검열백서] 만들기' 게시판이 2-1번 게시판(go jinbo 2 1)에 만들어졌고, 실무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오프라인 모임이 6월 26일(수요일) 7시 연대앞 사회과학서점 오늘의책 옆에 있는 <가운누리>(전화:337-0791)에서 있습니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들, 그리고 그 밖에도 이 활동의 의의에 동의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PC통신 공간에서 계속되는 폭력적인 통제를 상기고 고발합시다.

6월 월례포럼의 자리에서는 'PC통신검열백서'를 통신연대 공식사업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PC통신검열백서] 만들기' 게시판이 2-1번 게시판(go jinbo 2 1)에 만들어졌고, 실무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오프라인 모임이 6월 26일(수요일) 7시 연대앞 사회과학서점 오늘의책 옆에 있는 <가운누리>(전화:337-0791)에서 있습니다.